월간

나라재정

MONTHLY PUBLIC FINANCE INFORMATION / Vol.13 / Jan. 2018

01

기획 특집

국민의 삶을 바꾸는 2018년도 예산

안일환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재정칼럼

2018년 정부의 재정운용

김유찬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

재정정책의 중장기 도전 과제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소득주도 성장과 재정운용

박승준 대구대 경제학과 교수

이슈포커스

재정혁신 국제컨퍼런스 현장 스케치

2018년 사이버 공격 트렌드 전망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키워드재정

예산성과 우수사례

풀어쓰는 경제·재정이야기

ISSN 2508-89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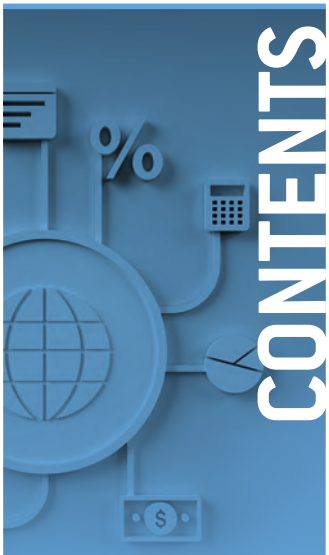
KPFIS 한국재정정보원
Korea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rvice

국가재정 업무발전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Global Finance Platform Builder

디지털 재정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재정 전문기관

한국재정정보원
Korea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rvice



CONTENTS

월간 나라재정 1월호

MONTHLY PUBLIC FINANCE INFORMATION

Vol.13 / January. 2018

기획 특집

국민의 삶을 바꾸는 2018년도 예산 06
안일환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재정칼럼

2018년 정부의 재정운용 14
김유찬 홍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재정정책의 중장기 도전 과제 17
류덕현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소득주도 성장과 재정운용 20
박승준 대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슈포커스

재정혁신 국제컨퍼런스 현장 스케치 26

2018년 사이버 공격 트렌드 전망 34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44

키워드재정

이달의 이슈키워드: 수학능력시험, 지진 56

예산성과 우수사례

2018년 예산성과금제도 운영 방향 64

풀어쓰는 경제재정이야기 ①

고대 중국의 화폐 제도 68

한국재정정보원 소식 72

MONTHLY

기획 특집 SPECIAL

기획 특집은 정부 부처의 담당자들이
정책 방향 및 사업을 소개하는 장입니다.

PUBLIC FINANCE INFORMATION

06 / 국민의 삶을 바꾸는 2018년도 예산

안일환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ilwhan@korea.kr

SPECIAL

안일환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ilwhan@korea.kr

국민의 삶을 바꾸는 2018년도 예산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의 회복,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집행 등에 힘입어 3년 만에 3%대 성장을 복원하는 등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특정 부문 중심의 성장으로 부문 간 격차가 지속되고 있고, 분배악화 및 고용부진 등으로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특히,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어 지난 2017년에 고령사회로 진입한 상황에서, 지속적 성장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 재정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 될 것이다. 이러한 우리 경제 현안 해결을 위해 2018년 나라살림은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편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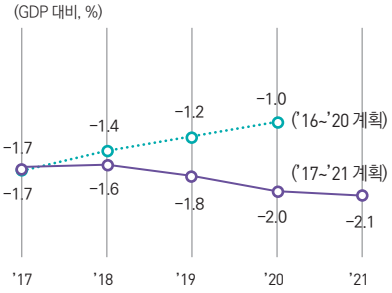
2018년 나라살림은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편성

1. 2018년도 예산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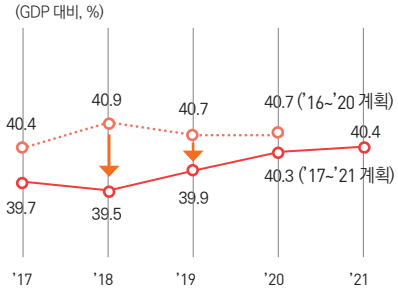
2018년도 예산은 428.8조 원으로 2017년도 예산인 400.5조 원(본예산 기준)에 비해 7.1%를 늘려 잡았다. 총지출 증가율 7.1%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자,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경상성장률(내년도 전망치 4.5%)을 상회하는 수치이다. 크게 늘어난 금년도 예산은 새정부 주요 정책과제뿐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 지원, 보훈·보상 확대 등 일자리와 복지를 확대하는 추가적인 소요도 충분히 담았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구현한 금년 예산을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재정건전성은 안정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2017년도 세법개정안 등을 통한 세입기반 확충과 함께 양적·질적 구조조정으로 2018년도 재정수지는 GDP 대비 -1.6%, 국가채무 비율은 GDP 대비 39.5%로 전년보다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수지 : GDP 대비 −2% 초반 수준



국가채무 : GDP 대비 40% 수준



2. 2018년도 예산의 특징

2018년도 예산의 주요 특징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분야 간 투자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여 재원배분 구조를 혁신하였다는 것이다. SOC 등 물적 투자는 적정 관리하고, 복지·일자리·교육 등 사람에 대한 투자는 대폭 확대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데 힘쓴다. 이러한 흐름에서 그간 많은 투자로 자본스톡이 상당히 축적된 SOC 분야는 감액(전년 대비 -14.2%)하고, 일자리 창출 및 양극화 완화 등을 위해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증액(전년 대비 +11.7%)하였다.

2018년도 예산의 주요 특징은 분야 간 투자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여 재원배분 구조를 혁신한 것임

또 하나의 특징은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하였다는 것이다. 재정의 적극적·선제적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해 각 사업의 성과와 집행수준, 투자의 우선순위 등을 원점(zero-base)에서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하거나 낭비성 성격의 지출은 감축하거나 폐지하였다.

그간 상당한 투자가 축적된 SOC, 환경, 문화, 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성과가 부진한 일부 복지사업 등도 구조조정 하였다. 이러한 양적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협력적 네트워크 지원 등을 통한 렌트 배분체계 개선, 대학창업·ODA 분야 융합예산 편성 등 질적 지출 구조조정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당초 계획한 9조 원의 목표를 2조 원 이상 초과한 11.5조 원의 구조조정 실적을 달성(정부안 편성 기준)하였다.

3. 2018년도 예산의 중점 투자방향

구체적인 내용면에서 금년 예산은 '사람 중심의 따뜻한 재정운용'을 실현하기 위해 (1)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2) 소득주도 성장 기반 마련, (3) 혁신성장 동력 확충, (4) 국민이 안전한 나라, (5) 인적자원 개발의 5가지 방향에 초점을 두고 편성되었다.

(1)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 격차 완화 등 일자리 전반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재정적 투자 및 지원을 확대한다.

민간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층을 대상으로 「재학 - 구직 - 재직」 단계까지 패키지로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채용하면 1명분 임금을 지원(3년간, 연 2천만 원 한도)하는 추가 채용 지원제도를 1.5만 명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에 장기 근속하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도 5만 명으로 확대하였다.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을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충하는 한편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지원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충하는 한편, 비정규직 고용안정에도 힘쓴다. 국민생활·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중앙직 공무원을 1.2만 명 추가 충원하고, 보육·요양 분야 등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2.5만 개를 창출한다. 이와 함께 기간제의 무기계약직 전환, 청소·경비·시설관리 용역근로자 직접 고용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금년 최저임금 증가율(전년 대비 16.4%)에 맞추어 아이돌보미 수당 등 인건비·고용부담금 인상 등을 지원한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시 지급하는 급여 지원을 통상임금의 80%로 인상(기존 60%)하고, 아빠의 육아휴직 급여도 첫 아이든 둘째 아이든 상관없이 모두 200만 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3개월간 30만 원씩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 등을 통해 실업안전망을 강화하고, 노사가 상생하는 일자리 모델을 발굴·확산하여 한국형 고용 안정·유연 모델을 정립하고자 한다.

(2) 소득주도 성장 기반 마련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서민들의 생활비를 경감하는 등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소득수준 하위 90% 이하의 만 0~5세 아동 양육가구에는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월 25만으로 인상하고 지원 대상 또한 확대한다. 노인일자리는 7.7만 명, 자활사업은 1,500명 확대하며, 청년희망 키움통장을 신규 도입하여 '일하는 복지'를 적극 지원한다. 또한 참전유공자들에게 지급하는 무공·참전수당을 기존에 비해 월 8만 원 인상하는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생계곤란 가구의 주택을 매입한 후 이를 재임대하는 등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60개월 이상의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등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데에도 힘쓴다. 또한 전국 252개소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치매요양시설을 확충(192개소)하며,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확대를 통해 치매국가책임제를 적극적으로 이행한다.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최대 월 13만 원을 지원하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들의 고용유지를 도모한다. 또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1,911억 원)하여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힘쓴다. 또한 전국에 신규 도시재생 지역을 대폭 확대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낙후된 도시기능을 재활성화하는 등 지역 균형발전에도 투자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들의 고용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재정을 지원

(3) 혁신성장 동력 확충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혁신 생태계 지원 및 혁신성장 거점 구축 등 혁신성장 동력 확충에 대한 재정지원을 최대한 확대한다.

우선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개발 투자를 1.5조 원 규모로 확대한다. 특히 국내외 기술격차가 큰 AI(인공지능),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 지능형 센서·반도체 등 핵심기술 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융합기술 개발을 위해 의료·자율자동차에 대한 테스트베드 및 공용플랫폼 구축을 지원한다. 2,100개의 스마트 공장을 추가 보급하고, 스마트 공장 구축·고도화 등을 위한 융자를 새로이 도입함으로써 제조업 생산 프로세스의 혁신도 함께 뒷받침한다.

혁신성장의 거점을 구축하기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참여·혁신형 창업공간인 '메이커 스페이스'를 설치·확대하여 메이커 전문 인력양성과 창의적 문

화 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혁신 인적자본의 확충을 위해 과목 간 융합형 교원 연수를 1,000명으로 확대(기존 800명)하고, 학교밖 SW 교실도 기존 300개에서 600개로 2배 확대하는 등 혁신형 인재 양성에 힘쓴다.

이와 함께 각종 정보가 유용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정보공유 기반을 마련하고, 사람·정보·공간의 연결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각종 규제를 전면 개선하는 데에도 투자한다. 이를 위해 국가가 보유한 데이터를 민간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융·복합 데이터를 생성하여 환자중심의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등 정보공유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4) 국민이 안전한 나라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위해 국방비를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인 전년대비 7%로 대폭 확대

국방비를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인 전년대비 7.0%로 대폭 확대한다. 북핵 위협 등에 대비하여 Kill-Chain,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 KMPR(대량응징보복)의 3축 체계 조기구축과 함께 우리나라 최초의 스텔스기(F-35A)의 차질 없는 인수를 지원한다. 아울러 병 봉급 2배 인상(병장기준, 21.6→40.6만 원)과 함께 급식비 단가를 인상하는 등 군 장병의 복지와 사기 향상을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안전투자도 지속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화물차 조기폐차 지원 수를 기존 2배 수준인 12만 대로 확대하고, 건설기계 및 대형 화물차의 저감 장치 부착을 지원한다. 또한, 대기오염 국가측정망 27개를 추가 확충하고, 종합 대기측정소 및 집중 측정소를 신규 운영하여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응급의료 전용헬기를 확충(+212억 원)하는 등 응급이송체계를 개선하는 데에도 투자한다.

먹거리 안전 강화를 위해 친환경 축산농가에 대해 정기적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항생제 검사를 확대하는 등 농산물 안정성 조사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축사시설을 현대화하여 가축질병의 주요 원인이 되는 밀집·밀식사육 환경을 개선한다. 달걀 등 가금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가금산물 이력제 도입 기반을 구축하고, 잔류물질 검사 분석 및 현장검증 장비들의 확충도 지원한다.

재난·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한반도 지하 단층구조를 조사하는 등 지진예측 기능을 강화하고, 지진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지진 대비 인프라를 확충한다. 경기 남부와 충남 서북부 수계를 연결하는 등 가뭄 상습피해지역에 대한 항구적 대책도 마련한다. 아울러 버스와 화물차 등

에 차로이탈 경고장치 등 첨단 안전장치 장착을 새로 지원하여 졸음운전을 예방하고 대형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5) 인적자원 개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주거·보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통근이 편리한 곳을 중심으로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3만 호를 확대 공급하고,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자금 대출상품을 신설한다. 이와 함께 국공립 450개소, 공공형 150개소 어린이집 공급을 통해 양질의 공보육 시설을 대폭 확충한다.

교육이 희망사다리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전액 국고지원(2.1조 원)하여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확대한다. 영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비대상자 등에 대한 재직자 능력계발을 지원하는 등 평생·직업 교육도 적극 지원한다.

고등교육의 경우 대학교 반값 등록금 수혜대상을 기존 3분위에서 4분위로 확대하는 한편, 해외대학 진학을 지원하는 드림장학금 지급 등 저소득 예비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해외유학·연수기회도 대폭 늘린다. 또한 국립대별 강점 분야를 지원하는 등 국립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발전 허브로 육성하는 데 800억 원을 투자한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주거·보육과 함께 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

4. 맺음말

새정부는 우리 경제의 중심을 '국가와 기업'에서 '국민 개개인과 가계'로 바꾸고, 성장의 과실이 국민 개개인들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금년 예산에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새로운 정책들을 많이 반영하였다. 우리 국민들이 이런 새 정책들을 실감하고, 또 "삶이 바뀌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배정, 집행 대비 및 사업계획 마련 등 철저한 준비를 진행해 나가겠다.

MONTHLY

재정 칼럼 COLUMM

재정 칼럼은 정보와 정책 진단 및 제언 등
재정 전문가의 기고를 통해 재정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장입니다.

PUBLIC FINANCE INFORMATION

14 / 2018년 정부의 재정운용

김유찬
홍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99yckim@gmail.com

17 / 재정정책의 중장기 도전 과제

류덕현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dhryu@cau.ac.kr

20 / 소득주도 성장과 재정운용

박승준
대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sjpark-econ@daegu.ac.kr

OPINION

김유찬
홍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99yckim@gmail.com

2018년 정부의 재정운용

2018년에 사용할 예산으로 정부는 총지출액 428.8조 원 규모의 분야별 나라살림살이 사용내역을 편성하였다. 총량적으로 보면 정부는 2018년의 총수입은 전년 본예산 대비 7.9%(32.9조 원) 증가하는 447.2조 원, 총지출은 7.1%(28.3조 원) 증가하는 428.8조 원으로 세입 및 세출 예산안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세출 및 세입예산의 증가율은 최근 수년간의 증가율이 대체로 5% 이하에 그쳤던 것에 비추어 문재인 정부의 바뀐 재정정책의 기조를 말해주고 있다.

2018년 정부의 총지출액 규모는 428.8조 원으로 전년대비 7.1% 증가한 수준

〈표 1〉 2018년 재정운용 전망

(단위 : 조 원, %)

	2017년		2018년	증감(C-A)(증가율)	증감(C-B)(증가율)
	본예산 (A)	추경예산 (B)	예산 (C)		
총수입	414.3	423.1	447.2	32.9(7.9%)	24.1(5.7%)
예산	268.7	277.5	294.8	26.1(9.7%)	17.3(6.2%)
(국세수입)	(242.3)	(251.1)	(268.1)	25.8(10.7%)	17.0(6.8%)
기금	145.6	145.6	152.4	6.8(4.7%)	6.8(4.7%)
총지출	400.5	410.1	428.8	28.3(7.1%)	18.7(4.6%)
예산	274.7	280.3	296.2	21.5(7.8%)	15.9(5.7%)
기금	125.9	129.8	132.6	6.7(5.3%)	2.8(2.2%)

자료: 기재부 보도자료, 2017. 7.,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일자리 창출과 복지 확대를 위하여 대체적으로 신중한 수준의 확장적인 예산편성을 한 것이라고 평가된다. 신중한 수준이라고 보는 이유는 2018년 예산의 총지출 규모는 2017년의 본 예산대비는 7.1% 늘어난 것이나 2017년의 추가경정예산과 비교하여서는 5%에 못미치는 수준의 증가라서 재정건전성의 우려를 충분하게 반영한 조심스러운 확장 수준이기 때문이다.

기재부 보도자료에 따른 2017년 10월까지의 누적 국세수입은 237조 원 정도이다. 이로 미루어 2017년 추경예산상의 국세수입 251조 원을 무난하게 달성할 뿐 아니라 상당규모의 초과세수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그

리고 이 기조는 2018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2018년 예산안 통과시점에 예측된 2018년의 재정수지는 GDP 대비 1.6%의 적자이며, 2017년 대비 0.1%p 개선되는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2018년까지의 누적 국가채무 수준도 GDP 대비 39.6%로 이 또한 2017년 대비 0.1%p 개선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 지속될 국세수입 호조세를 감안하면 2018년 예산안 통과시점에 예측한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수준보다 더 양호한 지표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표 2〉 2017년 이후의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전망

(단위 : 조 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	-28 (-1.7)	-29 (-1.6)	-33 (-1.8)	-38 (-2.0)	-44 (-2.1)
통합재정수지 (GDP 대비, %)	14 (0.8)	18 (1.0)	18 (1.0)	15 (0.8)	13 (0.6)
국가채무 (GDP 대비, %)	670 (39.7)	709 (39.6)	749 (39.9)	793 (40.3)	835 (40.4)

자료: 기재부,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는 2018년도에는 1조 원 감소하고 그 후 매년 평균 약 5조 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

위의 〈표 2〉는 기재부의 중기재정계획에 따른 것으로 관리재정수지는 2018년도에는 1조 원 감소하고 그 후 매년 평균 약 5조 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018년도에는 0.1%p 감소하나 그 후 2021년까지 매년 평균 0.17%p씩 증가하며 2021년도에는 2017년도 대비 0.4%p 증가 한 2.1%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통합재정수지는 2018년도에 4조 원 증가하여 18조 원이 되며 2019년도에는 같은 수준을 유지 후 조금씩 감소하여 2021년도에는 2017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13조 원으로 회복되며,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2018년도에 0.2%p 증가 후 2020년 이후 0.2%p씩 감소하여 2021년도에는 0.6%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 모든 전망은 그러나 최근의 국세수입 호조세를 부분적으로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실제적인 관리 및 통합재정수지는 〈표 2〉가 예측하는 수준보다 더 양호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생각하면 이 양호함, 즉 관리재정수지 적자의 축소나 통합재정수지 흑자의 확대는 거시경제적으로 정부가 해야하는 경기조절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민간부분에서 정

부부문으로 국세수입 등으로 유입되는 자금을 다시 적절한 분야에서의 지출을 통하여 들어온 규모 이상으로 내보내주어야 국가전체에서 경기가 진작되는 것이다. 앞으로 당분간 한국의 경제상황은 적극적 재정정책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경제성장률 저하, 내수부족, 복지수요, 고령화, 청년실업, 노동시장 상황 등은 정부의 조금 더 강력하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복지분야의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에 대하여 의무지출 분야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미래의 재정압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이 OECD국가들의 복지비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절반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수십 년 후에 일어날 수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에 대하여 미리 당겨서 걱정부터 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복지지출의 증가와 고령화 추세가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개연성은 완전하게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시야를 더 장기적으로 가져갈수록 사람 중심의, 복지와 교육에 더 많이 투자하는 방향으로의 예산구조의 변화는 더 절실해진다. 고령화는 사람의 수명이 길어지는 긍정적인 변화의 결과로서 이에 맞추어 개인들 생애에서 일하고 시장에서 소득을 획득하는 경제활동시기를 늘려가야 한다. 사람의 자연적인 신체의 한계로 인하여 물론 평균적인 수명이 길어지는 비율만큼 경제활동시기가 늘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명확하나 이는 여성인구의 경제활동참여율을 높여 나가면서 극복해 나가야 한다. 고령화보다 심각한 것은 사실 고령화와 통상 같이 나타나는 저출산 문제이며, 저출산의 문제의 해결 혹은 완화 없이는 장기적인 경제발전과 국가재정의 문제는 불가능한 것이다. 저출산의 문제의 해결은 일자리, 주거, 교육, 건강, 노후 대책 등 모든 분야에서 사람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결국 경제발전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려하면 할수록 일자리 창출, 복지와 교육 분야에 대하여 투자를 늘려야 하며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의 역할은 그 과제를 잘 이행해 나가는 쪽에 있다고 본다.

경제성장률 저하, 내수부족, 복지수요, 고령화, 청년실업 등은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요구

재정정책의 중장기 도전 과제

류덕현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dhryu@cau.ac.kr

인구고령화, 성장잠재력 약화, 복지재정지출 급등, 소득불평등 확대, 미래 통일대비 등 중장기 정책 제약 존재

중장기 정책 제약조건들

한국 경제가 직면한 중장기적인 정책 제약조건은 논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크게 인구고령화, 성장잠재력 약화, 복지재정지출 급등, 소득불평등 확대, 그리고 미래 통일대비 등으로 꼽을 수 있다. 인구고령화는 성장잠재력 약화 그리고 복지확대에 따른 재정소요 급증 등과 같은 파생적 문제를 낳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사회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큰 변화가 없을 경우 인구감소의 시대가 예견되며 과거의 높은 경제성장률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성장이 정체되는 상황에서 경제적 불평등이 확대·고착되어 하위층의 경제적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생산성, 부가가치 및 종사자 임금 등의 격차는 확대되는 추세이며 500인 이상 기업의 1인당 부가가치 대비 중소기업의 1인당 부가가치는 장기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1990년대 말 이후 하위층과 상위층 비중이 상승하고 중위층 비중이 하락하는 양극화 현상으로 소득불평등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또한 미래의 통일에 대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이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과거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단기, 중기, 장기형 통일 형태에 따라 통일 후 10년 동안 남한 GDP의 1.3~6.0%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정부재정이 필요로 하는 일은 매우 많으며 문제의 심각성은 큰 데 반해 재정수입 기반은 갈수록 약화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경제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튼튼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던 재정건전성이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

위에서 언급한 제약조건들로 인해 주요 재정정책과제 등은 어느 하나 간단치 않으며 정책당국에게 큰 도전을 안기고 있다. 분야별 재원배분의 방향성, 복지수준 제고와 부담률 상향, 그리고 재정개혁과제 등이 이러한 도전과제들인데 이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분야별 재원배분의 방향 설정

먼저, 분야별 재원배분의 방향성에 대한 적절한 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 재정의 분야별 지출현황을 특징적으로 살펴볼 때 OECD 국가평균과 비교하여 보면 인프라 지출은 매우 높고, 교육 및 보건에 대한 지출은 낮으며, 재분배 지출은 매우 낮은 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과거 경제성장 단계에서 인프라에 대한 높은 투자와 경기침체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관행적 인프라 투자로 인해 정부지출 중 인프라 지출에 대한 비중이 지나치게 큰 것에 기인한 것이다. 교육의 질 개선과 건강·보건 등에 대한 지출은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의 중요 요소로 내생적 성장이론의 관점에서 장기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대한 지출비중은 GDP 대비 비중을 따지면 비교적 낮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대한 재원배분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재원배분 조정이 필요하고, 복지지출 증대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마련이 필요

복지수준과 부담수준에 대한 논의

다음으로 복지수준과 부담수준에 관한 논의이다. 최근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인구고령화/저출산/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으로 복지재정지출이 급증하고 있다. 또한 장기적인 경기침체의 지속, 청년실업 급증, 소상공인 업종 침체, 소득분배 악화 등 국민생활수준의 지속적 저하 등은 사회안전망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우리 실정을 고려할 때 이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비슷한 수준의 경제력을 갖춘 나라들과의 국제비교에서도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OECD 사회복지지출(SOCX) 비율은 33개국 중 32위로 가장 낮은 수준이며 국민부담률도 31위(조세부담률은 30위)를 보이고 있다. 복지지출과 부담수준을 향후 OECD 중위 국가 평균으로 지향해 나간다고 할 때 지금부터 상당한 지출 부담 증가를 각오해야 한다. 또한 복지지출과 재원조달 관련 패키지에 대한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문제인데 복지지출의 재원배분 중 많은 부분이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국고지원으로, 이 부분을 제외한 일반사회복지의 영역에 대한 재원배분의 비중을 어느 정도 높일 것인가 하는 것도 중요한 논제이다.

재정개혁: 지출구조조정, 세입기반 확충, 재정건전화

한편, 재정개혁에 대한 논의도 빼놓을 수 없는 도전과제이다. 지출구조조정, 세입기반 확대, 그리고 재정건전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포괄하는 것이 바로 재정개혁에 대한 논의인데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예는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이다. 일본의 재정건전성은 과거 1990년부터 근 20년 동안 크게 악화되었는데 이에 대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재정개혁의 시기를 놓쳤다는 것이다. 1990년대에 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이 이미 크게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걸쳐 고령화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단기적인 경기부양으로 일관하여 구조개혁의 시기를 놓쳤다. 또한 재정적자가 고착되고 경제가 긴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면서 제대로 된 재정개혁의 시기를 번번이 놓치고 성장잠재력 확충과 부실기업 정리 등 전반적인 개혁 역시 실패하였다. 특히, 연금 및 건강보험 등 재정적자 요인들에 대한 재정개혁이 실패하였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실패의 이면에는 국민들이 재정개혁보다는 재정확대에 따른 혜택에 저항하지 못한 측면도 있는 것이다. 2015년 말 정부가 발표한 206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2060년에 국가채무가 GDP 대비 최대 62% 수준이 될 것으로 다소 낙관적으로 전망한 바 있다. 재정당국은 과거에도 그러했지만 앞으로도 정부 정책의 최후의 금고지기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점이 장기재정전망에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제약조건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재정소요를 충당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재정의 안정화와 개혁 필수

여러 제약조건이 있지만 필요한 재정소요를 충당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재정의 안정화와 개혁은 필수적이다. 세입측면에서는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이라는 보편적 원칙을 지키면서도 공평한 과세가 가능하도록 조세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해야 세원확대를 통한 과세기반 확충이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해마다 55조 원이 넘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개혁, 복지전달 체계의 개선, 경제지출(SOC 포함) 효율화, 공공성지출 확대 등의 지출구조조정 역시 필수적이다. 공기업 부채 조정, 공공부문의 개혁 및 재정지출사업의 상시적인 평가 고도화 등도 재정개혁의 필수적인 요소로 진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박승준
대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sjpark-econ@daegu.ac.kr

소득주도 성장과 재정운용

포스트 케인즈주의 경제학자들은 임금을 시장구매력의 원천으로 볼 뿐만 아니라, 임금의 분배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경제의 구조적 특성에 따른 실증적 문제임을 주장

2007년의 글로벌 경제위기는 지금까지의 경제학적 사고와 정책을 지배해온 전통적인 신념(conventional wisdom)에 대한 큰 도전이었다. 대침체의 발발과 그 여파에 따른 느린 경기회복은 임금억제가 성장실적을 강화시키고 동적인 경제시스템을 만든다는 전통적인 성장전략의 한계를 드러냈으며, '경제성장은 운전석에 앉고, 소득재분배는 뒷좌석에 앉아야 한다(growth should be in the driver's seat and distribution in the backseat)'는 그간의 통념을 의심케 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앵거스 디턴(Angus Deaton)은 그의 저서 『위대한 탈출』에서 "거의 모든 국가에서 성장속도가 느려질 때 사람 간 격차가 확대된다"는 지적을 통해 경제성장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고 꼬집었다.

포스트 케인즈주의 경제학자들(post-Keynesian)은 기본적으로 임금을 시장구매력의 원천으로 볼 뿐만 아니라, 임금의 분배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경제의 구조적 특성에 따른 실증적 문제임을 주장한다. 문재인 정부가 과거의 성장방식에서 벗어나 소득주도 성장을 핵심적인 경제철학으로 내세우고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시프트를 주창하는 데에는 이러한 포스트 케인즈주의 성장론이 있다고 보여진다. 주류 경제학의 입장에서 볼 때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장기적인 성장을 유인할 것이라는 전망은 다소 비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소득불균형이 심화됨에 따라 과거의 성장 전략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위기의식의 고조와 함께 성장과 분배의 포용적 성장에 대한 기대가 커진 점, 한국경제의 경우 내수 비중이 적고 대외환경 변화에 취약한 경제구조인 점을 감안할 때 소득주도 성장론은 충분히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정부에서는 '사람 중심 경제'라는 캐치 프레이즈 아래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대통령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사람 중심 경제는 일자리와 늘어난 가계소득이 내수를 이끌어 성장하는 경제이며, 혁신창업과 새로운 산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경제라고 설명하였다. 즉,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정부지출은 소득주도 성

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정책수단이라 할 수 있다. 케인즈 단순모형에서 정부지출이 증가하면 국민소득은 정부지출 증가분 이상으로 증가하는데, 이것을 승수효과라고 한다. 정부지출이 승수효과를 갖는 이유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소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정부지출이 증가하면 소득이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하면 다시 소비를 증가시키게 된다. 이러한 정부지출의 승수효과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케인즈의 이론처럼 소득의 증가와 소비의 증가가 상호 반복적인 상승작용을 일으킬 경우 정부지출의 국민소득 증대 효과의 크기와 지속성은 확대된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재화 및 용역시장에 한정된 모습이고 금융시장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면 승수효과는 보다 작아지게 된다. 어쨌건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수단이자 정부지출의 실행계획인 2018년도 정부예산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는 내수 비중이 적고 대외환경변화에 취약한 경제구조인 점을 감안할 때 소득주도 성장론은 충분히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관점에서 2018년 정부예산을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의 정부지출 증가폭을 감안할 때 2018년의 예산의 총지출 증가율은 지난해 본예산 대비 7.1%로 최근 5년 간 최고 수준이다. 이번 정부가 작은 정부를 지향하지 않고 할 일을 하겠다는 입장임을 감안하면 총지출 규모는 그렇게 무리한 수준이라 보기는 어렵다. 둘째, 2018년도 예산의 가장 큰 특징은 일자리 창출 및 질 제고에 많은 예산을 배정했다는 것이다.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학습 병행제 확대, 중소기업 추가채용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확대 등이 그것이다. 최근 3~4년에 걸쳐 연간 실

업률과 청년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을 뿐만 아니라,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등 고용시장 이중구조로 인해 임금 및 복지의 격차가 급격하게 확대되어온 사실을 고려할 때, 정부의 일자리 예산배정은 자연스러운 정책방향이라 하겠다. 다만, 일자리 안정자금의 경우 많은 부분 정부가 대상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기업주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전달체계 상에 문제발생 소지가 상존한다. 따라서 정부지출의 전달체계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달체계가 길고 자의적인 대상자 파악이 이뤄지는 경우 정부지출 전달체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의 직접 재정지원 일자리 외에 경제 내 일자리는 대부분 민간기업에 의해 창출되고 고용되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유인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해 일자리 안전망을 개편·확대하여 창업과 스타트업 등 모험적 경제활동 증가를 유인하여 민간의 일자리 창출력 제고를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셋째, 공무원 증원의 경우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년보장과 연금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부담 문제를 간과할 수는 없지만, 증원이 민간이 공급하기 어려운 소방·치안·국방·요양·양로 등의 부문에 한정되어 있고, 노동시장의 과도기적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단기정책이라는 점,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취업에 대한 욕구 해소에 미약하나마 숨통을 틔워주고 희망을 제공하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향후 충원된 영역에서의 승진, 급여 인상 및 공무원연금 문제까지 세심하게 모니터링하고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세출구조조정 및 재원배분 측면이다. 한정된 예산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느 분야에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재원배분 및 지출 구조조정이 중요하며 승수효과를 증대시키는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정부는 복지·보건·고용, 교육, 국방, 외교·통일, 공공질서·안전 위주로 금년도 예산을 증액시킨 데 비해, SOC, 문화·체육·관광, 환경, 산업·중소기업·에너지, R&D, 농림·수산·식품 등의 예산은 삭감하거나 소폭 증가시켰다. 정부지출 승수를 측정한 기존연구[1]에 근거하여 정부예산은 검토하면 재정지출 승수가 가장 높은 SOC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의 대폭적 또는 일부 삭감은 아쉬운 측면이 있다. 반면, 정부재정계획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

2018년도 예산의 특징은 일자리 창출 및 질 제고에 많은 예산을 배정했다는 것

1) 박승준, 「재정확대의 거시경제적 효과 분석: 분야별 재원배분을 중심으로」, 국회예산정책처, 2009 및 김승래 외, 「부문별 재정지출의 거시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9 참조

회복지·보건 분야의 경우 상대적으로 지출승수가 높지는 않지만,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에 전달된다는 점에서 소비와 소득의 상호견인 효과 증대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의해야 할 점은 사회복지·보건 분야 지출은 총지출 대비 비중이 높을 뿐 아니라, 의무지출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예산의 하방경직성이 강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항상 같이 살펴야만 한다. 다섯째, 향후 교육제도 혁신을 통한 창조적 학습사회 구축을 염두할 때 이번 예산계획에서 고등교육 지원 내용이 빈약하다. 지난 20여 년 동안 학령인구의 대학진학률은 지속적으로 높아졌으나,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 및 창조적 진화의 부재 속에서 대학의 교육역량이 한계에 봉착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대학예산이 빈약할 뿐만 아니라, 취업률 제고라는 단기적 목표 달성에만 집중하고 있어 미래 인적자원의 실질적 개발은 미약한 상황이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전환되면서 학령인구의 절대적 감소가 초래되어 대학들의 미충원율이 증가하고 있는 형편이다. 뿐만 아니라, 세계화 확산과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에 따라 세계 유수대학과의 글로벌 경쟁구도가 구축되었지만, 국내 대학들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대학의 구조개혁, 공영형 사립대학의 출범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안 및 재정 합리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정된 예산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느 분야에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가 중요

MONTHLY

이슈포커스 ANALYSIS

이슈포커스는 한국재정정보원 연구진들이
재정 현안을 이해하기 쉽게 소개하는 장입니다.

PUBLIC FINANCE INFORMATION

26 / 재정혁신 국제컨퍼런스 현장 스케치

34 / 2018년 사이버 공격 트렌드 전망

심혜인
재정통계분석팀 부연구위원
hyein@kpfis.kr

이찬우
손해보험협회 보안담당자
jg719411@nate.com

ANALYSIS

재정혁신 국제컨퍼런스 현장 스케치

기획재정부(주최)와 한국재정정보원(주관)은 2017년 12월 14일~15일 이틀에 걸쳐 '지속가능 사회와 재정운용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재정혁신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기조연설과 제1주제~제4주제의 총 다섯 개 세션으로 구성되어 진행되었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그룹(World Bank Group) 등 주요 국제기구 및 국·내외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그간의 재정혁신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재정혁신 방향을 모색하였다. 이번 컨퍼런스는 지속가능한 재정운용과 재정혁신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이에 본고에서는 「재정혁신 국제컨퍼런스」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개회사 : 김용진 기획재정부 차관

김용진 기획재정부 차관은 12월 14일 '재정혁신 국제컨퍼런스'의 개회사에서 "한국 경제가 대내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과를 내는 이유는 구조개혁에 대한 한국정부의 지속적인 노력 덕분"이라는 리가르드 IMF 총재 발언을 언급하면서,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물적·자본 중심의 투자 흐름을 사람 중심의 투자로 전환하고 모방·추격형 성장 모형을 혁신성장 모형으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이를 위하여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과 함께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출구조 혁신을 통해 재정투자 방향을 재설정하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개회사에 이어 세계은행그룹 부총재와 국제통화기금 재정부문국장이 각각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과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을 위한 재정정책에 대해 기조연설을 하였다.

Mahmoud Mohieldin 세계은행그룹(World Bank Group) 부총재는 확장적 재정정책의 결과 투자와 수출의 증대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경기회복이 이어지고 있으나 산출갭 축소, 금융 충격 위험, 지정학적인 긴장 고조 등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재정개혁은 사회의 취약 계층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금이전, 보조금 정책 등 재정개혁 과정에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Vitor Gaspar 국제통화기금(IMF) 재정부문국장은 재정개혁이 다른 분야의 개혁을 이끌어 내는 동력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구조적인 재정개혁을 통해 포용적 성장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생산성 향상과 경제성장을 위한 재정의 구조적 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R&D 조세유인제도, 기업 간 생산성 격차 완화와 자원배분 효율화, 노동시장과 실물시장 개혁을 위한 재정지원의 필요성 등을 강조하였다.

Mahmoud Mohieldin
세계은행그룹(World Bank Group) 부총재

Vitor Gaspar
국제통화기금(IMF) 재정부문국장

제1주제

4대 재정개혁과제의 성과 점검

박진 교수(KDI 국제정책대학원)의 사회로 제1주제 '4대 재정개혁과제의 성과 점검'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박정수 교수(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는 '4대 재정개혁의 점검과 미래 방향'에 대하여 발표하면서 4대 재정개혁 테마에 대하여 배분, 재배분, 경제안정화 측면에서 성과가 있었으나 효과성 측면에서는 새로운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재정 환경에 대해 고도성장이 끝나고 저출산 시대에 돌입하였으며, 세수 부족, 성장률 저하, 재정운용의 한계, 복지지출 증가 등 재정수요 확대, 적자폭 증가, 지방분권 강화와 같은 다양한 도전요인이 존재함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앞으로의 재정개혁에 대해서 크게 ① 재정 규율(aggregate fiscal discipline)을 통한 재정 총량 관리, ② 배분적 효율성(allocative efficiency) 제고, ③ 운영 효율성(operational efficiency) 제고의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조조정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집행 개혁과 지속적 재정 개혁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작성 】

심혜인
재정통계분석팀 부연구위원
hyein@kpfis.kr

Delphine Moretti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임 정책 애널리스트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엄태호 교수(연세대학교 행정학과)는 예산의 본질적 문제로서 국가정책과 연결된 합의과정의 정치적 성격을 언급하였다. 재정개혁의 테마는 효율성으로 귀결되므로 효율성과 정치적 합리성을 연결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동안 개혁들이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것에서 벗어나 목적과 수단을 더욱 정치하게 연결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서 정보에 근거한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고 통제보다는 의사결정 지원의 측면에서 재정제도의 개혁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에 이어서 박노욱 조세재정연구원 재정성과평가센터장은 현재 한국의 재정개혁 성과관리는 외국에서도 선진사례에 해당하며, 다만 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이를 위하여 재정의 장기예측 기능을 강화하고, 향후에는 정보획득과 축적에 유용한 기능을 하고 있는 디브레인시스템이 한 단계 더 나아가 정보 공개를 통해 의사결정에 정보가 활용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Delphine Moretti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임 정책 애널리스트는 오스트리아, 스웨덴, 영국 등 중기재정계획을 오래 전부터 도입하여 운용한 국가들의 경험을 고려할 것을 제안하였다. 많은 국가들에서 중기재정계획은 광범위한 관점에서 운용되며 성과지표는 분절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점과 미시-거시 개혁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한편, 이정희 교수(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는 재정개혁의 목적은 지속가능성, 효율성, 관리 및 통제 등 다양할 수 있으며, 적절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였다.

제2주제
주요국 재정개혁 사례와 성과

제2주제 '주요국 재정개혁 사례와 성과'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은 김원식 교수(건국대학교 경제학과)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OECD 국가들의 예산개혁(budget reforms)'을 주제로 발표한 Delphine Moretti는 OECD 회원국 중 불평등이 높은 국가일수록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하며 경제적, 사회적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환경 속에서 재정개혁에 있어 예산당국에 대한 신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재정수지, 부채관리 등 중장기적으로 재정이 지속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마련이 필요하며, '재원배

분 전략'으로는 지출 통제와 더불어 재정여력 마련과 지출 효과성을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재정의 책임성'을 위해 외부감사, 재정위원회 설치 등 국민참여를 통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Niklas Frank 스웨덴 재정정책협의회 부국장은 '스웨덴의 재정정책 개혁'을 발표하면서 스웨덴에서는 1990년대 초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금, 예산, 조세 분야에서 재정개혁이 있었으며 이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스웨덴의 연금개혁은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 체계로 전환하고 소득과의 연계, 자동조절 장치 도입 등의 방식으로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예산개혁은 탑다운 예산제도, 지출한도 설정, 지방정부의 균형재정 달성 등을 시행하고 있는데 예산시스템 운영에 있어 법적 규제보다는 협의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조세개혁은 법인세 공제 축소 및 최대 50% 한계세율을 기반으로 한 누진소득세, 30%의 자본소득 비례세 등 보다 간단하며 포괄적인 조세 원칙으로 개혁의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구조개혁에 있어 지속성 및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담보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정치적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였다.

Niklas Frank
스웨덴 재정정책협의회 부국장

Marc Robinson 선임 컨설턴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예산개혁' 발표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준칙 개정, 재정전망의 중요성, 지출규율 강화 등 재정규율이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그는 총량적 규율의 핵심은 지출준칙과 지출상한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최근 관심도가 감소하고 있기는 하나 지출심사제도(spending review)는 하향식 예산제도 하에서 재정여력을 확대하고 한정된 예산의 분배를 개선하는 지출규율 제도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출감축 수단으로 유용하게 사용되었으며, 아일랜드는 금융위기 이후 적극적인 재정개혁을 단행하고 지출심사제도를 시행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언급하였다. 최근에는 재정전망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이는 총액한도를 정하는 데 필수적이며 지출여력 파악시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Marc Robinson
선임 컨설턴트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권오성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처한 환경은 OECD 국가들과는 다를 수 있으므로 국내의 정치적·제도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재정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새로운 제도의 도입보다는 현재 우수한 제도들이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박기백 교수(서울시립대학교 조세학과)는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은 지속적으로 늘어나야 하며 이에 대해 재정준칙의 적용 여부와 정치적 합의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는데 이를 어떻게 도출해 낼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Delphine Moretti는 예산시스템 자체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각국이 처한 환경에 대한 고려와 역량 축적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으며, 제도와 개혁은 정체된 것이 아니고 주기적인 검토와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정치적 합의와 게임의 규칙으로 개혁의 지속가능성과 재정의 안정성이 담보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제3주제
사람중심 경제구현을 위한 재정혁신 과제

제3주제 '사람중심 경제구현을 위한 재정혁신 과제'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은 황성현 교수(인천대학교 경제학과)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Vinaya Swaroop 세계은행그룹(World Bank Group) 아프리카 지역 경제자문은 '사람중심 재정개혁'을 주제로 신중한 재정정책(prudent fiscal policy)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요건이며, 여러 국가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사람중심의 재정혁신 프로그램 설계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혁신에 있어 취약계층을 보호하면서 재정 안정화를 달성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이나 분명히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 재정혁신 과정에서 인프라 등 장기적 성장을 위한 지출과 빈곤층 지원을 위한 지출을 보호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한편, 이와 같은 사람중심 재정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소통전략(communication strategy)의 병행을 강조하였다.

Vinaya Swaroop
세계은행그룹(World Bank Group)
아프리카지역 경제자문

이에 이어서 '한국의 소득주도(income-led) 성장'을 발표한 주상영 교수(건국대학교 경제학과)는 분배, 수요, 공급 측면에서 살펴볼 때 최근 한국경제는 수요진작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 즉, 분배 측면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가계-기업 간, 계층 간 소득분배 구조가 급격히 악화되었으며, 수요 측면에서는 2008년 이후 낮은 이자율에도 불구하고 저축투자갭((총저축-총투자)/국내총생산)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일 뿐만 아니라 공급 측면에서 GDP 대비 자본비율이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고 있어 자본이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용 친화적 정책

과 그 밖에 적절한 재정, 통화, 신용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임을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최상대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장은 '새 정부의 재정정책방향'을 주제로 우리나라의 현 경제 상황과 새 정부의 재정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였다. 최상대 국장은 3,900억 달러까지 증가한 외환보유고 수준,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분기별 GDP성장률 및 수출증가율 등으로 알 수 있듯이 최근 한국의 경제 상황은 나쁘지 않으나 장기 성장률 저하, 소득불평등 심화 등 경제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재정운용에 있어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되며, 사람중심 투자,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지속가능 성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를 위해 새 정부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등 지원방식의 개편을 추진하고, 재정의 민주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국민참여예산제도, 재정정보 공개, 중앙과 지방의 기능조정 및 재원배분에 대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장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김유찬 교수(홍익대학교 세무대학원)는 조세정책 중 자산소득 및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를 강화해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재정 책임성을 위해 납세한 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쉽게 볼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박용주 한국재정정보원 재정정보연구본부장은 경제가 효율성 측면에서만 인식되어 왔으며, Musgrav가 언급한 재정의 3대 기능인 재원의 배분, 소득의 재분배, 안정적인 성장의 측면에서 살펴볼 때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을 이끄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소득재분배의 관점에서는 재정의 기능이 다소 미흡했는데, 따라서 최근에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다시 살린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여력은 충분하나 향후에는 노령화 등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전에 성공적인 재정혁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는 민주적 절차에 의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박용주
한국재정정보원 재정정보연구본부장

Niklas Frank는 스웨덴의 경험에서 살펴볼 때, 한국에서도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 해결에 있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능력과 연관되며 종합적인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예를 들어 아동수당과 같은 지엽적인 제도보다는 육아휴가 또는 육아참여를 보장하여 복귀 후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 도입을 고려하여 일과 육아를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김준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제4주제

바람직한 재정혁신의 방향 및 장애요인 극복방안

제4주제는 김준기 교수(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사회로 '바람직한 재정혁신의 방향 및 장애요인 극복방안'에 대한 종합 토론이 진행되었다.

김원식 교수는 우리나라는 그간 추진하였던 재정개혁에 있어서 탑다운(top-down) 방식의 예산 배분과 성과관리 방식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앞으로의 재정혁신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미시적인 관점으로 변화해야 하고, 성장에서 기회의 균등,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예산 반영, 공공재정에 대한 역량 고취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통일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며 재정, 연금, 세제 등에서 동시적인 개혁이 진행되어야 할 것임을 지적하였다.

박정수 교수는 저출산과 저성장 추이는 향후 고령화 문제가 부각되었을 때 재정개혁의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우려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한 재정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합의에 따른 정책 수립이 필요하며,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재정준칙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중장기적 시각에서 지출한도 설정 등 구속력 있는 재정규율이 필요하며, 배분적 효율성과 중복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Marc Robinson은 한국의 경우 재정지표는 매우 건전한 편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한국과 OECD 국가들과의 차이점은 재정지출 규모가 작은 편이고 조세 규모 역시 작기 때문에 향후 복지지출이 늘어날 경우 이에 대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한국은 정부 역할의 확장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국민적 호응을 어떻게 이끌어 낼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에서 수행한 재정개혁 제도에 대하여 세세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자국의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검토해 볼 것을 제안하였다.

Vinaya Swaroop은 한국은 인구학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두 개의 도전과제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저출산율과 고령화라는 인구학적인 변화에 대하여 아프리카의 경우 청장년층이 많고 출산율이 매우 높아 일자리 창출 정책이 중요한 반면 한국의 경우 높은 고령층 빈곤율과 청장년층의 부양부담이 커질 것임을 지적하였다. 한편, 한국은 경제적 측면에서 구조적인 장기침체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만큼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추진하는 기조에 대해서는 동의하며 다만 정부의 최저임금 보조금 정책은 정

책의 부작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였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재정기획심의관은 재정혁신의 도전 과제를 사회경제적 측면, 통일 측면, 정치적 측면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우선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는 잠재경제성장률의 저하, 불평등 심화, 고령화 등의 문제가 있으며, 현재까지는 재정 건전성이 좋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향후 재정여력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도전 과제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현재 분단 국가로서의 상황이 거시경제적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통일은 거시경제적으로는 성장요인이 될 수 있으나 재정지출의 측면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측면에서는 정책의 수립과 예산의 집행 과정에서 정책당국과 정치권의 견제와 협업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장기적인 측면에서 더 넓고 큰 관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장기적인 국가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할 것임을 제안하였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재정기획심의관

이원식 한국재정정보원장은 폐회사를 통해 한국재정정보원이 재정의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한국재정정보원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 업무를 위탁받는 등 재정정보 인프라의 핵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원식 원장은 재정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데 있어 재정정보시스템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한국재정정보원은 재정개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더불어 이번 행사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가 되고 국제기구와의 지속적인 재정정책 협력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원식
한국재정정보원장

2018년 사이버 공격 트렌드 전망

2017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사회 전반적으로 피해 범위가 넓고 경제적 파급이 큰 사이버 공격이 계속되어 왔다. 또한 글로벌 사이버 환경은 계속 진화하고 있으며 새로운 기능과 배포 방법의 진화를 통해 다양한 플랫폼에서 상용 서비스를 위협하는 정교한 악성코드가 등장하고 있다. 2018년에는 평창 동계 올림픽과 6월 지방선거 등과 같은 사회적 이슈를 노린 사이버 공격이 활발해질 것으로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온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가상화폐의 거래소를 향한 공격도 주요한 사이버 보안이슈가 될 전망이다. 제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여 초연결 사회에 접어든 현대의 디지털 사회는 디지털 패러다임의 변화와 더불어 초연결 해킹시대에 접어들었다. 이에 대하여 본고는 2017년의 주요 사고를 회고하고, 최신 위협분석 사례를 토대로 분석한 2018년 사이버 공격 트렌드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글로벌 사이버 환경과 공격 방식은 끊임없이 진화

1. 개 요

2017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인 피해를 일으킨 '워너크라이(Wannacry)' 랜섬웨어 사태, 사드 논란에 따른 중국발 해킹 공격, 호스팅 업체를 목표로 한 인터넷 나야나 랜섬웨어 해킹사태, 빗썸 및 유빗 등을 포함한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해킹그룹의 NSA(미국 국가안전국) 해킹으로 인한 해킹도구 유출, 미라이 봇넷 공격 등 사회 전반적으로 피해 범위가 넓고 경제적 파급이 큰 사이버 공격 등이 계속되어 왔다. 또한 글로벌 사이버 환경은 계속 진화하고 있으며 새로운 기능과 배포 방법의 진화를 통해 다양한 플랫폼에서 상용 서비스를 위협하는 정교한 멀웨어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장에서는 2017년 5대 사이버 공격 이슈를 살펴보고, 3장에서는 2018년 10대 사이버 공격 트렌드를 전망해 보며, 4장에서는 본고의 결론으로써 제4차 산업혁명의 변환에 따른 패러다임의 변화와 해킹 위협에 당면한 우리의 의무를 알아본다.

【 작성 】
이찬우
손해보험협회 보안담당자
jg719411@nate.com

2. 2017년 5대 사이버공격 이슈

본 절은 2017년 한 해 동안 사이버 사고를 회고하고, 주요한 키워드를 알아봄으로써 2018년 사이버 공격 트렌드를 예측하기 위해 반드시 참고해야 하는 중요 지표를 다섯 가지로 구분한다. 크게 나누면 ① 랜섬웨어 공격, ② 가상화폐 비트코인 공격, ③ 공급망 공격, ④ 대형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⑤ 표적형 APT공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랜섬웨어 공격의 지속

랜섬웨어는 컴퓨터 시스템 또는 파일을 감염시켜 사용자의 접근을 제한하고 일종의 몸값을 요구하는 악성 소프트웨어의 일종이다. 1989년 이후로 꾸준하게 발생한 랜섬웨어 공격은 점차적으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지능적인 고도의 공격수법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올해 5월에 배포되었던 워너크라이(Wannacry) 랜섬웨어는 파일 공유에 사용되는 SMB(Server Message Block) 취약점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시스템을 감염시키고 스스로 확산하도록 제작되었다. 때문에 전 세계로 빠르게 유포되어 대규모 감염 피해 사태가 발생하였다. 워너크라이 랜섬웨어와 달리 에레보스(Erebus) 랜섬웨어는 특정 기업이나 기관을 표적으로 집중적인 공격을 시도했다. 공격자

랜섬웨어 공격은 갈수록 지능적인 공격 수법을 사용

그림 1. 워너크라이의 한국어 감염 화면

자료: Flickr, 2017. 〈https://www.flickr.com〉 (검색일 : 2018. 1. 8.)

비트코인과 공급망 공격의 증가

는 2017년 6월 대형 웹 호스팅 업체를 타깃으로 랜섬웨어를 감염시켜 13억 원이라는 몸값을 요구하고 해당 업체는 부도사태에 이르기도 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 공격 증가

비트코인이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가상의 암호화폐다.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이는 비트코인의 가치와 더불어 거래 추적이 어렵다는 이점 때문인지 2017년에 공격자들은 해킹을 통해 다수의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중요 파일이나 자료들을 암호화하고 비트코인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일례로 2017년 10월에는 국내 대형 여행사를 해킹한 공격자가 고객정보를 빌미로 비트코인을 요구한 사건이 발생했다. 공격자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직접 비트코인을 훔치기에 이르렀고,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를 대상으로 해킹을 시도하여 두 곳으로부터 각각 55억 원과 21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탈취한 사건도 발생하였다.

공급망 공격 지속

공급망 공격이란 기업이나 기관에 소프트웨어(SW)나 하드웨어(HW)를 공급하는 과정에 침투해 제품을 악의적으로 변조하거나 내부에 악성코드를 숨기는 형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공급망 공격은 사용자 수가 많아 영향력이 높은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한 공격이 2017년에 많이 발견되었다. 금융기

관에서 주로 사용하는 서버관리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업체가 해킹을 당해 사용자들이 위조된 모듈을 다운받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위조된 모듈은 백도어(Backdoor) 악성코드로서 개발단계에서 이미 악성코드가 심어져 유포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 외에도 누적 다운로드 수가 20억 건이 넘는 PC 최적화 프로그램의 다운로드 서버가 해킹당하는 사건도 있었다. 공격자들이 다운로드 서버에 악성코드를 심어 정상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사용자들에게 악성코드를 다운받도록 한 사례였다.

대형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국내 최대 학술논문 사이트에서 총 3,300만 건에 달하는 대규모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큰 피해가 발생했고, 이용자 수가 많은 국내 숙박업체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최초로 책임자 징계권고 제재를 받기도 했다. 작년에 이어 또다시 대형 항공사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여행사, 인터넷 쇼핑몰과 같은 사이트에서도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연이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함과 동시에 유출된 개인 정보는 블랙마켓에서 거래되거나 제2의 범죄에 재사용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과 표적형 APT공격 다수 발생

사회공학적 기법을 이용한 표적형 APT공격

사회공학이란 보안학적 측면에서 기술적인 방법이 아닌 사람들 간의 기본적인 신뢰와 행동학적 심리적 특성을 기반으로 사람을 속여 비밀 정보를 획득하는 기법을 의미한다. 2017년에는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메일이 더욱 지능화되어 정상적으로 보낸 메일과 유사하게 발송되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의심 없이 메일을 열어보고 악성코드에 감염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선거 시즌에는 후보자들의 안보정책 등의 문서로 위장하여 악성코드를 유포하였고 대기업 공채 시즌에는 입사지원서로 위장한 악성코드가 인사담당자에게 유포되었다. 이처럼 국내 정세를 정확하게 파악한 악성메일들 외에도 금융감독원, 국세청, 경찰청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한 악성메일도 다수 발견되었다.

3. 2018년 10대 사이버 공격 트렌드 전망

본 절은 2018년 사이버 공격 트렌드를 예측하기 위해 반드시 참고해야 하는 중요한 키워드를 10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크게 나누면 ① 사물인터넷 기기를 이용한 공격, ② 공급망을 통한 공격, ③ 가상화폐 관련 위협, ④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위협, ⑤ 지능형 랜섬웨어 공격, ⑥ 생체인증을 우회한 개인정보 유출, ⑦ 제로데이 공격의 증가, ⑧ 리눅스 악성코드를 통한 공격, ⑨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을 통한 공격, ⑩ 파일리스 악성코드 공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물인터넷 기기를 이용한 공격

2018년에는 IoT를 이용한 공격 트렌드 예상

사물인터넷이란 각종 사물에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하여 인터넷에 연결하는 통신기술을 의미한다. 인터넷으로 연결된 사물들이 데이터를 주고받아 스스로 분석하고 학습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이를 원격 조정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며, 여기서 사물이란 가전제품, 모바일 장비, 웨어러블 컴퓨터, 드론, 스마트 기기, 자동차, 빌딩 등 다양하다. 2017년에는 가정 및 업무 환경에서 수십 만대의 IoT 기기를 이용해 대형 디도스(DDoS) 공격을 감행한 사례가 나타났다. 여기서 IoT 기기를 활용한 디도스 공격이란 공격자가 IoT 기기를 악성코드로 감염시켜 좀비PC로 만들고, 이러한 좀비PC를 활용하여 특정 서버에게 수많은 접속시도를 만들어 다른 이용자가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공격 형태를 의미한다. 사이버 범죄자들은 취약한 보안 설정 및 가정용 IoT 기기의 미흡한 관리 등을 악용하여 범죄에 활용하기 위해 앞으로도 이러한 양상은 지속될 것이다. 나아가 공격자들은 IoT 기기의 입력 정보나 센서를 도용해 위조된 음성이나 이미지를 입력함으로써 실제 사용자가 아니라 IoT 기기를 가로챈 공격자가 원하는 대로 조종할 것이다. 사이버 범죄자들은 가정용 IoT 기기를 디도스 공격과 랜섬웨어 공격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네트워크에 지속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거점으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 사용자들은 가정에 있는 IoT 기기를 사이버 보안 측면에서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PC와 달리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 취약한 초기설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림 2. 초음파를 이용한 AI 비서 해킹 화면

자료: Youtube, 미래채널MyF, 2017. 〈http://www.myf21.net〉 (검색일 : 2018. 1. 8.)

공급망을 통한 공격

공급망과 가상화폐를 통한 공격 더 증가할 듯

2018년에도 꾸준하게 정상 소프트웨어 개발 및 배포 단계에서부터 악성코드를 숨기는 공급망 공격(supply chain attack)의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사용자 수가 많고 한 번에 큰 위협을 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노리는 공격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주로 소프트웨어 개발사를 해킹하여 악성코드를 심고, 사용자의 PC에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시 악성코드에 자동으로 감염되도록 하는 공급망 공격은 표적기관의 보안 시스템이 탐지하기 이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험성이 매우 높다. 개발 초기 단계에서도 공격할 수 있고 유지보수를 위한 업데이트 서버를 통해서 또는 납품 과정에서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 생명주기에 따른 안전한 보안 매커니즘의 설계가 필요하다.

가상화폐 관련 위협

최근 글로벌뿐만 아니라 국내 사이버 환경에서도 가상화폐는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이며, 2018년에는 이와 관련한 직·간접적인 침해사고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2017년 하반기부터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 침해사고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했고, 내년에는 공격자들에 의해 더욱 적극적인 가상화폐 공격이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 가상화폐에 적용된 블록체인 기술 자체는 해킹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공격자들은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개인들의 지갑 또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노릴 것이며, 거래 시 인증을 위한 크리덴셜(민감한 자격증명정보)을 훔치려는 시도가 증가할 것이다. 또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출금 알림 이메일을 사칭한 피싱 공격 및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입사지원으로 위장한 스피어피싱 공격이 발견되고 있으며 다양한 관련 공격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위협

클라우드란 인터넷 기반의 컴퓨팅 방법의 일종으로 개인과 기업이 인터넷을 통해 접속할 수 있는 회사의 데이터센터 및 서버 네트워크 시스템을 의미한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모바일 기기 및 개인 PC뿐만 아니라 기업환경에서 사용하는 서버 또는 업무시스템에 이르기까지 개인 또는 기업이 사용하는 콘텐츠를 보관해 주고 제3자에게 공유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상대적으로 외부에서의 접근이 쉽기 때문에 2018년에는 개인의 민감한 정보나 금융정보, 기업의 업무 관련 데이터를 유출 또는 파괴하려는 시도가 급증할 것이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본인인증을 통한 계정 로그인이 기본이며 계정정보 관리와 인증절차, 접근제어 등 다양한 관점에서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

APT와 랜섬웨어가 결합한 지능형 랜섬웨어로의 진화 예상

지능형 랜섬웨어 공격

2018년에는 '지능형 지속 위협'을 의미하는 APT(Advanced Persistent Threat)가 랜섬웨어와 결합하여 지능형 랜섬웨어로 진화할 것이며, 특유의 익명성을 가진 가상화폐의 가치가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이러한 지능형 랜섬

웨어는 가상화폐를 주된 타깃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이메일이나 보안이 취약한 웹사이트를 통해 랜섬웨어를 유포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던 것과 달리 2018년에는 '워너크라이', '페트야'와 같이 알려지지 않은 취약점을 이용하는 보다 진화된 형태의 랜섬웨어 공격이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최근에는 MS 윈도 응용 프로그램 간 동일한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허용하는 DDE(Dynamic Data Exchange) 기술을 악용한 랜섬웨어가 등장하며 이러한 지능형 랜섬웨어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생체인증을 우회한 개인정보 유출

신체적인 특성(지문, 홍채, 얼굴, 정맥 등)을 기반으로 하는 생체인증은 유일성과 편의성을 내세워 모바일 결제부터 PC 결제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편승하여 '생체정보기반인증'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우회 공격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보안 사고가 발생해도 그 값을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한 생체 정보의 특성을 감안할 때 사용자 고유의 생체정보를 노리는 보안 위협은 그 위험성이 크다. 독일의 해킹팀 CCC는 고성능 카메라로 지문을 촬영해 지문 정보를 추출하거나 스마트폰의 홍채 인식 시스템을 해킹해 잠금을 해제하는 시연을 통해 이러한 개념을 검증한 사례가 있다.

제로데이 공격의 증가와 생체인증을 우회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 증대

제로데이 공격의 증가

제로데이 공격이란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공격하는 기술적 위협의 일종으로 해당 취약점에 대한 패치가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취약점 공격을 의미한다.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부 국가기관이나 해킹조직이 보유하고 있던 알려지지 않은 취약점 정보 및 공격 도구가 공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치명적인 제로데이 공격이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로 2017년에는 국제 비영리 조직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미 중앙정보국(CIA)의 수많은 사이버 공격 도구를 악용한 공격이 빈번히 발생했다. 전 세계를 휩쓴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 역시 미 국가안보국(NSA)이 SMB 취약점을 이용해 만든 해킹 도구가 해킹 그룹 '쉐도우 브로커스'에 의해 유출됨에 따라 확산된 것으로 밝혀졌다.

리눅스 악성코드를 통한 공격

리눅스란 윈도우와 같은 컴퓨터 운영체제의 일종으로 4차 산업혁명이 급

격하게 이루어지며 사물인터넷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2018년에는 사물인터넷(IoT) 기기의 수가 휴대폰의 수를 능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리눅스의 활용범위는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사물인터넷의 증가로 인해 리눅스 악성코드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다양한 플랫폼에서 동작하는 크로스 플랫폼 악성코드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대규모 디도스(DDoS)공격을 발생시키는 미라이(Mirai) 악성코드의 소스코드 공개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사물인터넷 기기의 조합으로 2017년에 이어 또 다시 대규모의 디도스 공격이 발생할 수 있다. 더불어 IPTV, IP 카메라 같은 장비의 해킹을 통한 사생활 침해 범죄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을 이용한 공격

AI와 머신러닝, 파일리스 악성코드 공격의 위험

2018년에는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이 사이버 범죄자들에 의해 탐지를 우회하는 등의 악의적인 용도로 사용될 전망이다. 또한 많은 오픈소스와 지식 공유로 인하여 사이버보안 영역에서 공격자들의 해킹을 위한 인공지능의 활용과 보안 연구자들의 탐지 및 대응을 위한 인공지능의 활용 간의 치열한 경쟁이 생길 것이다. 나아가 사이버 범죄자들은 네트워크 침입을 위해 통상적으로 가장 많은 시간과 자원이 소모되는 네트워크 스캐닝 공격과 취약점 정보 수집 시 인공지능을 많이 활용할 것이다.

파일리스 악성코드 공격

파일리스 공격이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희생자의 컴퓨터에 악성파일을 다운로드 시키지 않는 악성코드의 일종이다. 2017년에도 파일리스(Fileless) 악성코드가 꾸준하게 등장했고 일반적인 악성코드 탐지 방법으로는 탐지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파일리스 악성코드는 지능형 랜섬웨어와 결합하여 더욱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미 올해 파일리스 악성코드를 통한 금융권 사고사례가 발견되었고, 워너크라이 사태를 통해 제로데이를 통한 악성코드의 배포에 따른 피해영향과 파급력을 증명하였다.

기타

위에서 살펴본 10가지 사이버 공격 트렌드 외에 다가올 2018년에는 암호화 트래픽의 위협, 범죄 서비스(Crime as a Service, CaaS) 툴과 범죄형 자동화 도구인 키트(Kit) 서비스의 확산, EU의 GDPR 문제로 인한 컴플라이

언스 위협, 우버 및 에퀴팍스와 같은 고객정보 수집 기업에 대한 해킹공세 등을 예측해 볼 수 있다.

4. 결론

2018년은 우리나라의 평창 동계 올림픽과 6월 지방선거 등과 같은 사회적 이슈를 노린 사이버 공격을 충분히 예상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온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가상화폐의 거래소를 향한 공격도 주요한 사이버 보안이슈가 될 전망이다. 점차 사이버 공격 대상과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피해의 범위는 개인과 기업을 넘어 국가적인 손실과 사회 혼란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향후 사이버 공격이 우리의 삶과 현대사회, 나아가서는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커다란 재앙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해 볼 수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을 맞아 초연결 사회에 접어든 현대의 디지털 사회는 디지털 패러다임의 변화와 더불어 초연결 해킹시대에 접어들었다. 결국 안락한 미래와 생산성의 증가를 누리기 위해 제4차 산업혁명을 피할 수 없다면, 우리는 마땅히 직면하게 될 해킹이라는 위협 앞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사회적 이슈를 노린 사이버 공격에 대한 보안 노력 필요

참고 자료

국가통계포털, 국내통계, 〈http://kosis.kr〉, 2010.

인터넷진흥원, 2018년 7대 사이버 공격전망, 〈https://www.krcert.or.kr〉, 2017.

시만텍, 2018년 10대 보안 전망 〈https://www.symantec.com〉, 2017.

이글루 시큐리티, 2018년 보안 위협·기술 전망 보고서 〈http://www.igloosec.co.kr〉, 2017.

포스포인트, 2018년도 사이버보안 전망 보고서 〈https://www.forcepoint.com〉, 2017.

보안뉴스, 2018 보안 키워드 넷 : 암호화폐·공급망·생체인증·IoT 〈http://www.boannews.com〉, 2017.

하우리, 되돌아보는 '17 5대 보안이슈 및 '18 보안위협 동향 5가지 〈https://www.hauri.co.kr〉, 2017.

이스트 시큐리티, 2018년 주의해야 할 예상 보안이슈 Top5 〈http://blog.alyac.co.kr〉, 2017.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1. 재정통계

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

2017년 11월 중 총수입은 26.7조 원, 총지출은 24.8조 원이다. 2017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누계 총수입은 399.2조 원으로 진도율은 94.4%이고 전년 동기 대비 26.7조 원 증가(진도율 1.5%p 상승)하였다. 2017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누계 총지출은 370.0조 원으로 진도율은 90.2%이고 전년 동기 대비 18.5조 원 증가(진도율 2.0%p 상승)하였다.

2017년 11월까지 수입지출 진도율은 각각 94.4%, 90.2%

표 1. 재정수지 추이(누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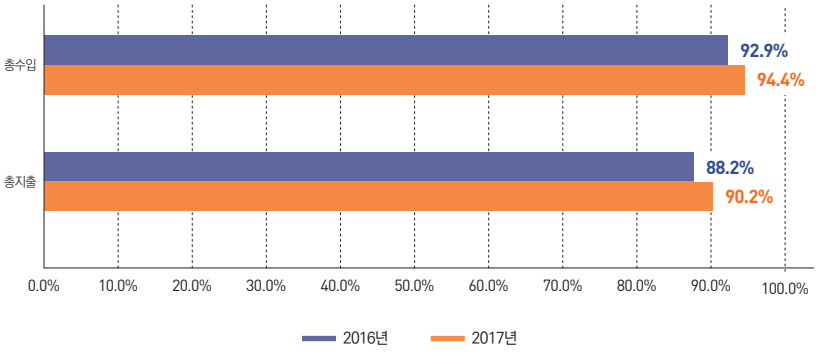
(단위 : 조 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6	총수입 (진도율)	40.2	65.9	103.4	150.8	179.8	207.1	249.0	280.3	309.9	348.2	372.5 (92.9%)	401.8
	총지출 (진도율)	30.9	68.0	117.5	146.4	175.4	215.1	241.0	264.5	301.7	330.9	351.5 (88.2%)	384.9
	통합재정수지	9.4	-2.1	-14.1	4.2	4.5	-8.1	8.1	15.8	8.2	17.3	21.0	16.9
	사회보장성기금수지	1.9	3.6	9.2	13.5	16.9	20.5	23.5	27.3	30.9	33.4	35.7	39.6
	관리재정수지	7.5	-5.7	-23.4	-9.2	-12.5	-28.5	-15.4	-11.6	-22.7	-16.1	-14.7	-22.7
2017	총수입 (진도율)	47.2	73.3	113.4	163.1	196.0	223.2	267.2	299.4	329.6	372.4	399.2 (94.4%)	-
	총지출 (진도율)	32.3	69.3	117.3	154.0	184.8	225.4	251.1	282.0	317.0	345.2	370.0 (90.2%)	-
	통합재정수지	14.9	4.0	-3.9	9.1	11.3	-2.2	16.1	17.4	12.7	27.2	29.2	-
	사회보장성기금수지	2.1	5.1	10.2	14.0	18.3	21.9	24.4	27.6	31.2	34.6	37.9	-
	관리재정수지	12.7	-1.1	-14.1	-5.0	-7.0	-24.1	-8.3	-10.2	-18.5	-7.4	-8.8	-

주: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검색일 : 2018. 1. 13.)

2017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29.2조 원 흑자이며, 사회보장성기금수지(37.9조 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8조 원 적자이다. 전년 동기 대비 통합재정수지는 8.2조 원, 관리재정수지는 6.0조 원 개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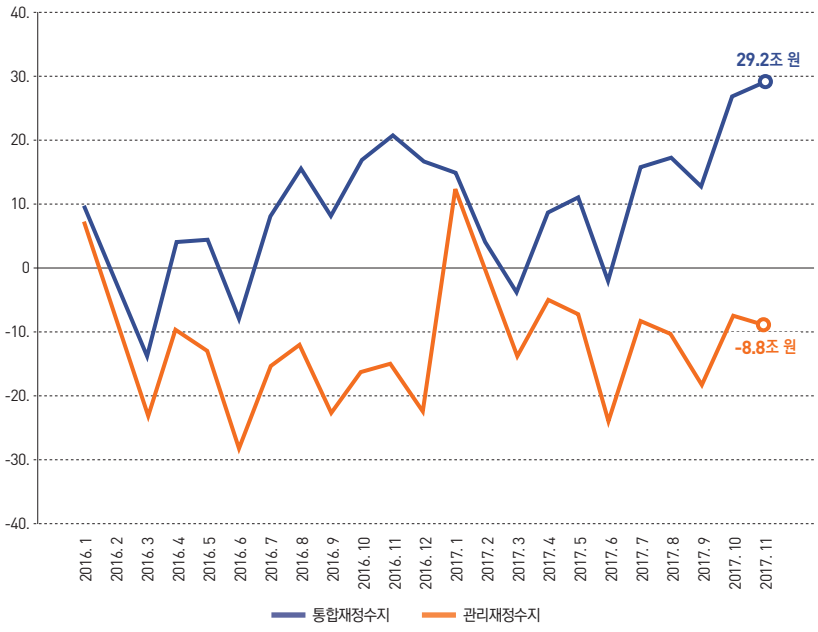
그림 1. 총수입, 총지출 1~11월 진도율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검색일 : 2018. 1. 13.)

그림 2. 재정수지 추이(누계 기준)

(단위 : 조 원)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검색일 : 2018. 1. 13.)

2017년 1월부터 11월까지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는 각각 29.2조 흑자, 8.8조 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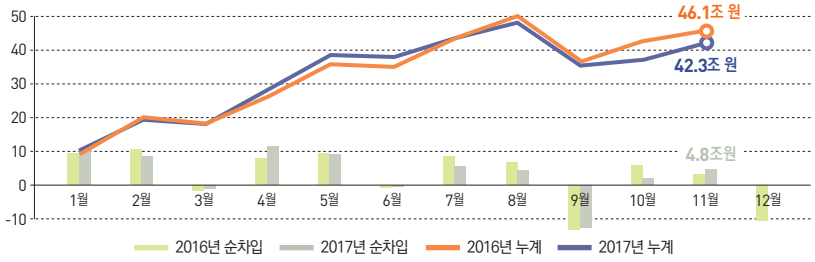
국가채무

2017년 11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의 연간 누적 순차입액은 42.3조 원이며 전년 동기 대비 3.8조 원 감소하였다. (2016년 11월 말 기준 46.1조 원)

11월 말 연간 누적 순차입액은 42.3조 원이며, 월간 순차입은 4.8조 원

그림 3. 월별 순차입 및 누계

(단위 :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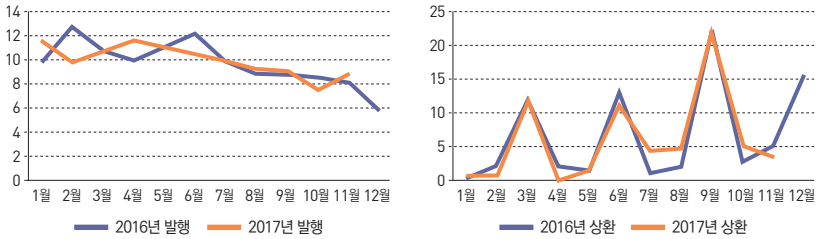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6	순차입	9.6	10.5	-1.7	8.0	9.8	-1.0	8.6	6.8	-13.6	6.0	3.1	-10.7
	누계	9.6	20.1	18.4	26.4	36.2	35.2	43.8	50.6	37.0	43.0	46.1	35.4
2017	순차입	10.6	8.8	-1.4	11.4	9.4	-0.6	5.6	4.5	-12.9	2.1	4.8	-
	누계	10.6	19.4	18.0	29.4	38.8	38.2	43.8	48.3	35.4	37.5	42.3	-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검색일 : 2018. 1. 13.)

2017년 11월 국가채무에서 차입금과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제외하고 발행된 국채는 8.8조원, 상환된 국채는 3.7조원이다. 2017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누적 발행액은 110.3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9조 원 감소하였으며, 누적 상환액은 67.1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조 원 증가하였다.

그림 4. 월별 발행 및 상환 추이

(단위 :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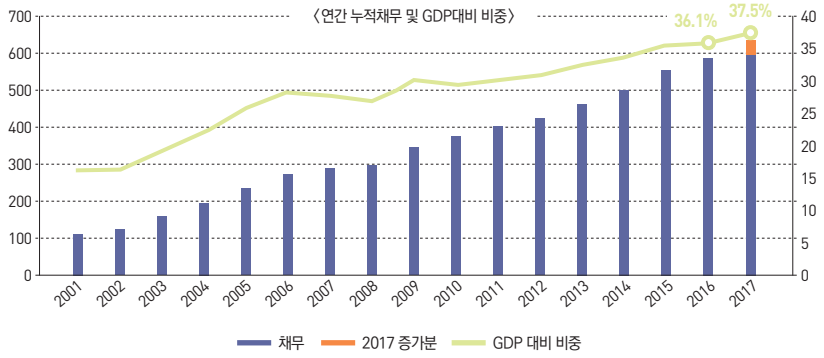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6	발행	9.9	12.7	10.8	10.0	11.1	12.2	9.9	8.9	8.9	8.6	8.2	5.9
	상환	0.6	2.4	12.0	2.1	1.5	13.2	1.1	2.2	22.3	2.8	5.3	15.7
2017	발행	11.6	9.9	10.8	11.6	11.1	10.6	10.0	9.3	9.1	7.5	8.8	-
	상환	0.8	0.9	12.1	0.1	1.7	11.3	4.4	4.8	22.0	5.3	3.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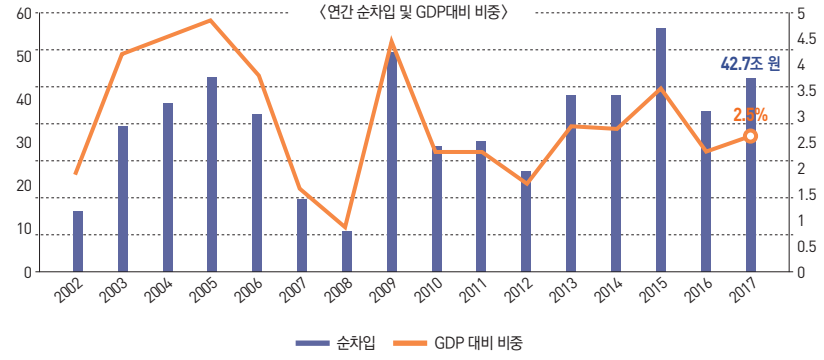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검색일 : 2018. 1. 13.)

2016년 기준 국가채무 누적 규모는 GDP대비 36.1%이다. 2017년 국가채무 누적규모는 10월까지의 누적 순차입(42.7조 원)만큼 증가하여 GDP 대비 37.5%('17-'22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이지만, 12월에 국채 상환이 이루어짐에 따라 연말 누적 채무 규모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이후 평균 연간 순차입 규모는 GDP 대비 약 2.3%이다.

그림 5. 누적 채무 및 연간 순차입

(단위 : 조 원, %)





2017년 11월 기준 누적채무 규모는 GDP 대비 37.5%이나, 12월에는 감소 예상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누적 채무	126.6 (16.6)	158.8 (19.6)	196.1 (22.4)	238.8 (26)	273.2 (28.3)	289.1 (27.7)	297.9 (27)	346.1 (30.1)	373.8 (29.5)	402.8 (30.2)	425.1 (30.9)	464 (32.5)	503 (33.9)	556.5 (35.7)	591.9 (36.1)	634.2 (37.5)
연간 순차입	13.5 (1.8)	32.2 (4.0)	37.3 (4.3)	42.7 (4.6)	34.4 (3.6)	15.9 (1.5)	8.8 (0.8)	48.2 (4.2)	27.7 (2.2)	29 (2.2)	22.3 (1.6)	38.9 (2.7)	39 (2.6)	53.5 (3.4)	35.4 (2.2)	42.3 (2.5)

주 1) 괄호안은 GDP대비 비중
2) 2017년도 GDP는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3) 연간 순차입 중 2017년은 11월까지 누적 순차입을 의미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검색일 : 2018. 1. 13.)

주요 관리대상사업 분야별 집행실적

2017년 주요 관리대상사업 중앙부처 예산은 233.8조 원이며, 1월부터 11월까지의 누적 집행액은 215.5조 원으로 연간계획 대비 92.2% 집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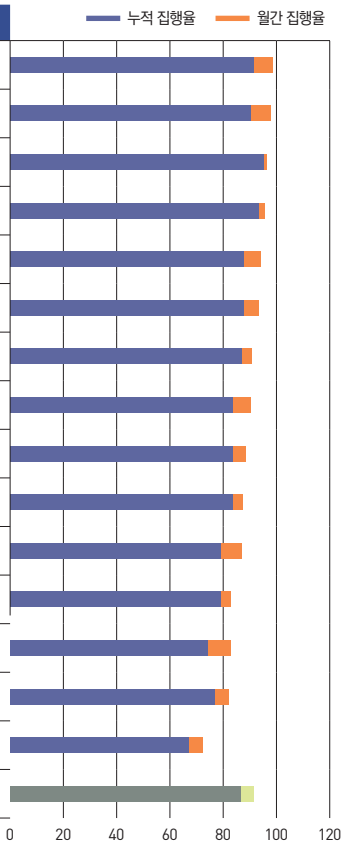
11월 기준 월간 집행률은 교통및물류(8.0%), 공공질서및안전(7.8%), 교육(7.2%),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7.2%), 문화 및 관광(7.1%) 분야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일반·지방행정(0.5%), 과학기술(2.2%) 분야는 월간 집행률이 비교적 낮게 기록되었다. 11월 말 기준 누적 집행률은 교육(99.2%),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97.9%), 일반·지방행정(96.4%), 과학기술(95.8%), 사회복지(94.3%) 분야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중앙부처 주요관리 대상사업 233.8조 원 11월 집행율은 연간계획 대비 92.2%

그림 6. 주요 관리대상사업 분야별 집행률 추이

(단위 : %)

분야	누적	월간
교육	99.2	7.2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97.9	7.2
일반·지방행정	96.4	0.5
과학기술	95.8	2.2
사회복지	94.3	6.5
환경	93.6	5.7
통신	91.1	4.0
문화및관광	90.7	7.1
통일·외교	88.5	4.3
보건	88.3	4.1
공공질서및안전	87.4	7.8
농림수산	83.4	3.9
교통및물류	82.8	8.0
국토및지역개발	82.5	5.3
국방	72.7	5.2
전체	92.2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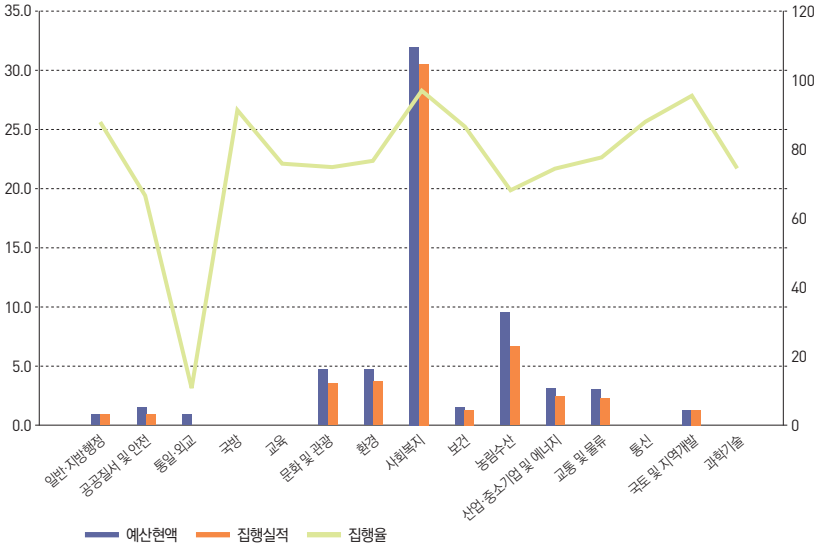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국고보조금

2017년 분야별 국고보조금 규모를 살펴보면, 예산현액을 기준으로 사회복지 분야가 31조 7605억 원(50.1%)으로 전체 국고보조금 규모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농림수산(15.0%), 환경(7.5%), 문화 및 관광(7.5%) 분야 순으로 국고보조금 규모가 크다. 2017년 12월 기준 예산현액 대비 집행 실적은 통일·외교 분야에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국고보조금 예산대비 집행실적은 통일·외교 분야가 가장 낮음

그림 7. 2017년 분야별 국고보조금 집행 실적(12월 누적 기준) (단위 : 조 원, %)



자료: e나라도움시스템

2. 테마통계

OECD에서는 매년 2회(6월경, 11월경)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간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세계 및 한국의 경제전망, 재정전망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OECD의 재정 전망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일반정부 지출 규모는 2017년 40%, 2018년 39.4%, 2019년 39.1%, 수입 규모는 2017년 37.4%, 2018년 37.1%, 2019년 36.9%로 수입과 지출 모두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지출규모는 2017년 32.4%, 2018년 32.3%, 2019년 32.3%, 수입규모는 2017년 34.2%, 2018년 34.0%, 2019년 33.9%로 유사하거나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OECD 국가들의 평균 수입과 지출 규모에 비해 한국은 수입과 지출 모두 그 비율이 낮은 편에 속한다. 반면, 프랑스, 핀란드, 덴마크, 벨기에, 노르웨이의 GDP 대비 일반정부 수입과 지출규모는 각각 5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OECD국가들의 GDP 대비 지출규모는 2017년 40%에서 2019년 39.1%로 감소할 전망

2017년 OECD가 전망하는 회원국들의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수지는 -2.6%이며,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gross financial liabilities)는 111.8%로 나타났다.

그림 8. 2017년 OECD 국가의 일반정부 총수입 및 총지출 전망

(단위 : %)

주) 총수입, 총지출: 2017년도 OECD 전망치. 중앙·지방정부·사회복지기금 포함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102 database

한국의 GDP 대비 총수입, 총지출은 각각 34.2%, 32.4%

한국의 2017년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수지는 1.8%로 OECD 회원국 중 2번째로 건전한 재정수지를 보이고 있다. 한국 정부에서 별도로 산출하는 관리재정수지 또한 2017년 기준 GDP 대비-1.7%로 OECD 국가들 중 양호한 수준에 속한다. 일반정부 부채 규모는 2017년 GDP 대비 45.8%[1]로 OECD 국가들의 평균인 111.8%보다 낮게 나타났다.

2017년 OECD 국가의 평균 재정수지와 부채비율은 각각 -2.6%, 111.8%

그림 9. 2017년 OECD 국가의 재정수지 및 일반정부 부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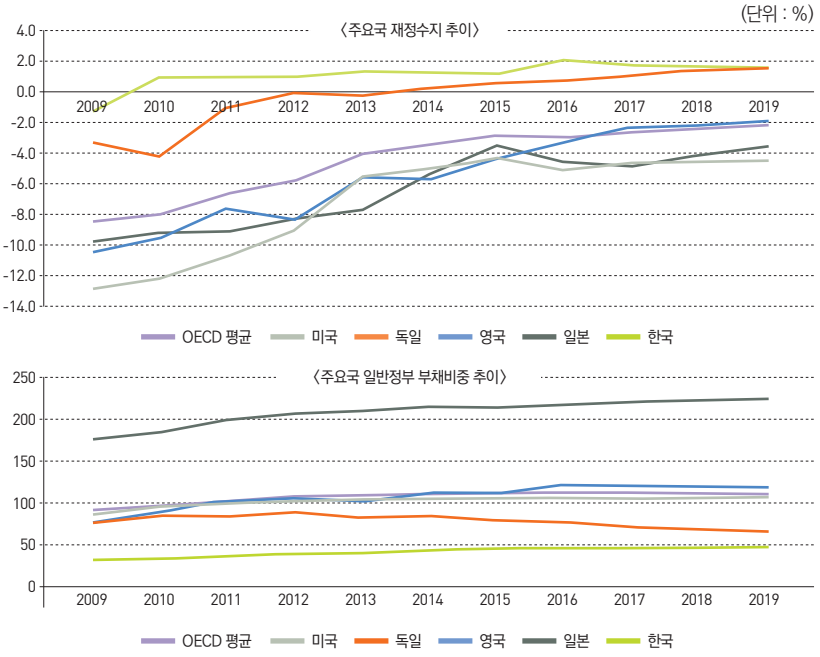
(단위 : %)

주 1) 재정 수지 : 2017년도 OECD 전망치
2) 일반정부 부채 : 비영리공공기관 포함 일반정부 부채
3) OECD가 발표한 한국의 통합재정수지는 1.8이며, 기획재정부 발표 관리재정수지는 -1.7%이다.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102 database

1) OECD의 기준인 일반정부 기준이며 이는 지방정부와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한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하는 중앙정부 채무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에서 2017년 40.4%로 발표되었다.

OECD 경제전망 보고서에서는 2013년 이후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규모가 OECD 평균 109%에서 2016년 기준으로 113%로 증가했지만, 2019년까지는 111%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15년 -2.9%, 2016년 -3.0%로 나타났던 일반정부 재정수지는 저금리로 인한 이자부담 경감으로 꾸준히 개선되어 2018년에는 -2.4%, 2019년에는 -2.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0. 주요국 재정수지 및 일반정부 부채 비중 추이



OECD 국가들의 재정수지 개선으로 평균 부채비중은 감소될 것으로 전망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한국	재정수지	-1.3	1.0	1.0	1.0	1.3	1.3	1.3	2.1	1.8	1.7	1.5
	부채비중	32	33	36	38	41	44	46	45	46	46	47
미국	재정수지	-12.8	-12.2	-10.8	-9.0	-5.5	-5.0	-4.3	-5.0	-4.6	-4.5	-4.5
	부채비중	87	95	100	103	105	105	105	107	105	106	107
일본	재정수지	-9.8	-9.1	-9.1	-8.3	-7.6	-5.4	-3.5	-4.6	-4.8	-4.1	-3.6
	부채비중	178	184	200	206	210	215	215	218	221	223	224
독일	재정수지	-3.2	-4.2	-1.0	0.0	-0.1	0.3	0.6	0.8	1.1	1.5	1.6
	부채비중	76	85	84	88	83	83	79	76	72	69	66
영국	재정수지	-10.4	-9.5	-7.6	-8.2	-5.6	-5.7	-4.3	-3.3	-2.3	-2.1	-1.9
	부채비중	77	89	103	107	102	112	112	122	121	120	119
OECD 평균	재정수지	-8.4	-8.0	-6.6	-5.7	-4.1	-3.5	-2.9	-3.0	-2.6	-2.4	-2.2
	부채비중	91	97	101	107	109	112	111	113	112	111	111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102 database

OECD 주요국 재정 전망

- **(한국)** GDP 대비 재정수지는 2017년에 1.8%, 2018년에 1.7%, 2019년 1.5%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
  - 국가채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 45.8%, 2018년 46.3%, 2019년 46.9%가 될 것으로 전망
  - 한국 정부는 공공 부문 고용 확대, 최저임금 인상, 사회복지 지출 증대 등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개혁을 추진

- **(미국)** GDP 대비 재정수지는 2017년 △4.6%, 2018년 △4.5%, 2019년 △4.5%로 전망
  - 2018년 재정정책은 개인 소득세와 법인세 삭감으로 확장 기조 예상
  - 세율 인하를 통해 2019년까지 가계지출 증가와 기업 투자 확대를 추진

OECD 주요국은 2019년까지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일본)** 2017년에 이어 2018년 재정확장 기조를 유지하나, 2018년 일반정부 재정수지는 GDP 대비 △4.1%로 증가할 전망(2017년 △4.8%)
  - 일본의 국가채무는 GDP 대비 220%를 넘어(2017년 221.0%, 2018년 223.3%) OECD 내 최고 수준으로 나타남
  -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소비세 인상, 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 규모 조정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재정계획이 필요

- **(독일)** 완만한 재정확장 기조를 유지하나, 2018년 일반정부 재정수지는 GDP 대비 1.5%로 2017년에 이어 흑자를 유지할 전망
  - 정부는 보육과 초등학교의 종일과정 확대 및 관련 인프라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지출을 계획
  - 소득세 감소에 의한 세입 감소를 부동산세 인상과 환경세 도입으로 보완

- **(영국)** 재정건전화 정책 시행으로 일반정부 재정수지는 2016년 △3.3%에서 2017년 △2.3%, 2018년 △2.1%, 2019년 △1.9%로 증가할 전망
  - 경기 부양을 위하여 확장적 통화정책을 추진 중이나 물가상승으로 인한 수출 비용 증가, 높은 가계 부채 등 위험이 상존
  - 브렉시트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경제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와 경제 정책이 필요

재정 용어 해설

총수입, 총지출

총수입과 총지출은 정부규모를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된다.

- 총수입 = 일반회계수입 + 특별회계수입 + 기금수입 - 내부거래 – 보전거래
- 총지출 = 총계(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 내부거래 – 보전지출

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는 당해 연도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수지이며, 관리재정수지는 미래에 지급해야하는 사회보장성기금 흑자 등을 제외한 것으로, 실질적인 재정운용결과의 판단지표로 활용된다.

- 통합재정수지 = 총수입 - 총지출
- 관리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 - 사회보장성기금수지
  (사회보장성기금수지 = 사회보장성기금 수입 - 사회보장성기금 지출)

국가채무, 국채

국가채무는 정부가 정부 이외의 민간이나 해외에 원리금 상환의무를 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 국가채무 = 국가보증채무(국채) + 차입금 + 국고채무부담행위
- 국채 = 국고채권 + 국민주택채권 + 외국환평형채권

주요 관리대상사업 집행실적

주요 관리대상사업 집행실적 점검은 법령에 의해 매월 지급하는 사업 이외의 재량적 성격의 사업에 대해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 강화,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실시된다.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으며 지방비(matching fund) 확보 의무가 있다.

키워드재정
KEYWORD

이달의 이슈키워드 : 수학능력시험, 지진

2017년 11월 한 달 동안 정책여론수렴시스템[1]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는 '수학능력시험'(2,442,266건)으로 2016년 11월 한 달 언급량(1,908,160건) 보다 27% 이상 급증하였다. 특히, 수능전날 발생한 지진으로 수학능력시험이 일주일 연기되면서 '지진' (1,350,947건) 역시 언급량 순위에서 상위를 차지하였다.

이달의 이슈키워드는 '수학능력시험'과 '지진'

그림 1. 11월 검색 순위

주 1) 수학능력시험은 유사어로 '수능'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포함하여 검색
2) 포항은 '포항시', '북구' 포함
3) 자료수집기간 : 2017. 11. 1.~2017. 11. 3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여론수렴시스템. (검색일 : 2017. 12.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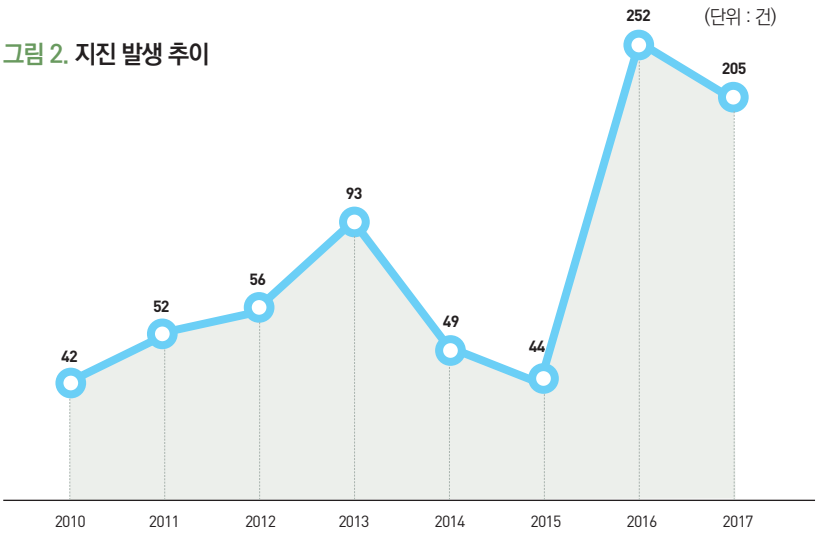
【 작성 】
김상기 연구원
sgkim@kpfis.kr

1)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빅데이터 분석시스템(big.pr.go.kr)

'지진'의 연관어로는 '포항', '지진피해', '대피', '수능' 등이 있었다.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과 수학능력시험의 연기결정으로 '포항'과 '수능'이, 지진피해에 대한 지원·보상과 지진 발생 시에 행동요령 안내로 '지진피해', '대피' 등이 연관어로 도출되었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의 지진발생 건수는 연평균 50여 건이었는데 반해 2016년 이후에는 200건 이상으로 급증하며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지진은 물론 다양한 재난을 대비하고, 재난으로 인한 피해 복구 및 구호를 위해 다양한 재정 사업을 편성·수행하고 있다.

그림 2. 지진 발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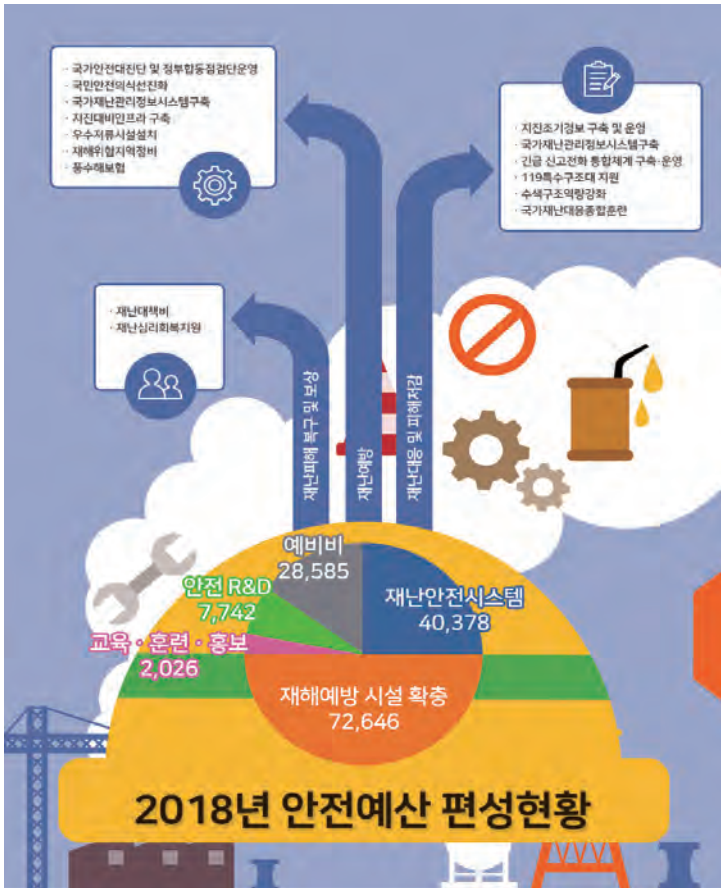
주 1) M(Magnitude)은 리히터 규모
2) 2017년 현재 기준
자료: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 〈www.necis.kma.go.kr.〉 (검색일 : 2017. 12. 5.)

2016년 이후 우리나라 연평균 지진 발생건수는 200건 이상

▶ 재난·안전 관련 재정사업

정부는 재난대응 능력을 강화하고자 2018년 안전예산으로 전년 14조 5,699억 원 대비 3.9% 증액된 15조 1,377억 원을 편성하였다. 재난예방부터 대응 및 피해복구까지, 전 재난 주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풍수해보험' 사업(174억 원), '지진조기경보 구축 및 운영' 사업(178억 원), '재난대책비' 사업(450억 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정부가 재정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주요 재난·안전 관련 사업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림 3. 2018년 안전예산 편성현황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자료는 최종 예산 기준). (검색일 : 2017. 12. 5.)

2018년 안전 관련 예산은
총 15조 1,377억 원

▶ 국민체감 안전문화 확산

불량식품부터 아파트 옹벽 균열발생까지 각종 안전사고 요인을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다('국가안전대진단 및 정부합동점검단운영' 사업, 10억 원). 신고대상은 생활주변의 모든 안전 위해요소로 법·제도에 대한 안전제안도 할 수 있으며, 안전신고 포털 안전신문고(www.safetyreport.go.kr) 또는 모바일 앱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신고 및 제안이 가능하다. 생활밀착형 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재난 시 행동요령 등 안전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으며('국민안전의식선진화' 사업, 36억 원), 국가재난정보센터, 재난심리 상담정보센터, 재난훈련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로 대피소 위치 안내 등 각종 재난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구축' 사업, 50억 원). 정

부는 앞으로 다양한 재난안전 콘텐츠를 개발하고 교육·홍보함으로써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생활안전 문화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 재난 대비 인프라 구축

2016년 기준 43.7%에 불과한 공공시설물 내진 성능 확보율[2]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2017년부터 '지진대비인프라 구축'사업(25억 원)으로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을 보강하고 있으며 지진대응 훈련표준모델 등 대응체계를 개선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우수저류시설설치' 사업(695억 원)으로 국지성 집중호우 등으로부터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우수저류시설를 설치하고 있으며, '재해위험지역정비' 사업(3,760억 원)으로 재난안전 취약지대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고, 재해 원인에 따라 재해위험지구를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구분하여 근원적인 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향후 정부는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 대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 풍수해보험료 지원

예기치 못한 풍수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주택 및 온실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는 풍수해보험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풍수해보험' 사업, 174억 원). 풍수해보험은 정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으로 대상 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뿐만이 아니라 지진까지도 포함[3]하고 있다. 보험료는 주거지역 등에 따라 상이하나 정부로부터 최대 92%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가입상품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최대 90%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경주시 단독주택 50㎡ 일반계층의 가입을 사례로 보면, 가입자는 총 보험료 38,600원 중 17,300원만 납부(정부지원금 21,300원)하였고, 피해 보험금으로 1,238만 원을 수령하였다. 특약(추가담보) 등 자세한 내용이나 가입신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운영보험사(DB손해보험(1588-0100), 현대해상(1588-5656), 삼성화재(1588-5114), KB손해보험(1544-0114), NH농협손해보험(1644-90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전위험 신고는 안전신문고(www.safetyreport.go.kr), 안전정보 확인은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

2) 행정안전부, 「2016년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 공시」.
3) 2012년 10월 「풍수해보험법」 개정으로 풍수해의 범위에 지진을 포함.

풍수해보험 가입으로 태풍, 지진 등 재난으로부터 받은 피해보상 가능

그림 4. 풍수해보험 보장내용

주 1) 면적(㎡)이 50㎡ 이하일 경우 50㎡로 계산
2) 기준단가는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의한 단가로 재질별로 다름
3) 전파는 파손된 골조 부분의 자재를 70% 이상 재구입하여 보수하여야 할 때
4) 반파는 파손된 골조 부분의 자재를 35% 이상 70% 미만 재구입하여 보수하여야 할 때
5) 소파는 파손된 골조 부분의 자재를 20% 이상 35% 미만 재구입하여 보수하여야 할 때
자료: KB손해보험(www.kbinsure.co.kr, 2017.12.6.)

▶ 재난알림 서비스

11월 15일 오후 2시 29분 31초, 포항에서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한 후, 22초 만에 지진조기경보가 발령되었고, 26초 만에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되었다. 이는 서울까지의 진동 도달 시간인 68~90초보다 최대 64초가 빠른 것으로 '지진 경보 구축 및 운영' 사업(178억 원)과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구

축' 사업(50억 원)을 통해 가능하였다. 만약 긴급재난문자 수신 기능이 없는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어 긴급재난문자를 받지 못하였다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앱 '안전디딤돌'을 설치하여 긴급재난문자 등 11개 기관 15개 재난안전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긴급신고 통합서비스

기존 21개 신고번호를 범죄신고는 112(경찰), 재난신고는 119(구급·소방), 그 외에 비긴급 민원상담은 110으로 통합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긴급 신고전화 통합체계 구축·운영' 사업, 54억 원). 국민은 유사시 쉽고 편리하게 신고하고 정부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죄상황(112)과 구급상황(119)이 동시에 발생하였더라도, 112, 119, 110 어디로 신고해도 정부의 공동 대응을 가능케 하였다.

그림 5.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 신고번호

긴급 범죄신고는 112
긴급 재난신고는 119
비긴급 민원상담은 110

▶ 재난피해 복구 및 지원

재난의 피해규모가 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정부는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재난대책비' 사업, 450억 원).

생활안정지원에는 구호금, 생계비, 주거비, 구호비, 교육비 등이 있다. 생계비는 재난으로 가족구성원 중 소득이 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 실종, 부상을 당하였거나 휴·폐업, 실직하여 소득을 상실한 경우 또는 재난으로 농업·어업·임업 및 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구호비는 주택이 파손되거나 유실되어 거주하던 곳에서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재난의 영향으로 주된 거주지를 떠나 생활할 경우 받는 지원이다. 생계비와 구호비의 중복지원은 금지되나, 생계비보다 구호비가 더 큰 경우에는 구호비를 지원할 수 있다. 생활안정지원은 재난피해자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나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에 신고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재난피해자에게는 구호금, 지방세 면제 등 직·간접적인 지원 제공

그림 6. 생활안정지원

지원항목	지원대상	지원금액
구호금	가족구성원이 사망 · 실종한 유족	세대주 : 10,000,000원 세대원 : 5,000,000원
	장해등급 7급 이상 부상자	세대주 : 5,000,000원 세대원 : 2,500,000원
생계비	주소득자 사망 · 실종 · 부상, 또는 휴폐업 · 실직	1인가구 : 418,400원 2인가구 : 712,500원 3인가구 : 921,800원 4인가구 : 1,131,000원 5인가구 : 1,340,300원 6인가구 : 1,549,500원 7인가구 이상 : 1인당 209,300원씩 추가
	주생계수단인 농 · 어 · 임 · 염생산업 시설의 50% 이상 피해	
주거비	주택피해로 거주 불가능	유실, 전파 : 9,000,000원 반파 : 4,500,000원 세입자 : 3,000,000원 이내 (보증금과 6개월분 임대료 중 많은 금액)
	피해예상 또는 수습 필요에 따라 거주 불가능	1,500,000원 이내 (5만원/일 기준으로 최대 30일분)
구호비	주택피해로 거주 불가능	유실, 전파 : 8,000원/1인/1일 기준으로 60일분 반파 : 8,000원/1인/1일 기준으로 30일분
	가족실종으로 구조현장 인근 생활 또는 격리 등	8,000원/1인/1일 기준으로 기본 15일분 최대 30일분
교육비	생활안정지원 대상 가구의 고등학생	교육감이 공고하는 고등학교 수업료의 6개월분

주 1) 전파란 주요 구조부가 50% 이상 파손되어 개축하지 않고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반파란 주요 구조부가 50% 이상 파손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자료: 행정안전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운영지침」(고시 제2017-1호)

간접지원에는 생활안정지원과 같은 직접적인 지원 외에, 관계법령에 따라 재난 피해자에게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지원 등이 있다. 지원기준은 피해정도, 발생지역 등에 따라 상이하나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포항시의 경우, 통신요금은 최대 1만2천500원 감면 받을 수 있으며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입영일자를 연기시킬 수 있다. 간접지원에 대한 자세한 안내나 신청은 관할 시·군·구 또는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그림 7. 포항 특별재난지역 간접지원 종류 및 기준

지원항목	지원기준
국세(소득세 등)	납부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최장 9개월 연장)
지방세(재산세 등)	감면 및 납기연장(최장 6개월) 대체취득시 취·등록세 면제
건강보험료	피해정도에 따라 30~50% 경감(3개월) 단, 인적·물적 피해 동시발생시 6개월
국민연금	최장 12개월 납부예외
전기료 감면	멸실 : 1개월분 요금 면제 파손 : 1개월분의 50%감면
통신요금	재난등급 1~90등급, 최대 12,500원 감면
복구자금 융자	농업 농협: 5년거치 10년상환(연리 1.5%) 어업 수협: 5년거치 10년상환(연리 1.5%) 산림 산림조합: 5년거치 10년상환(연리 1.5%) 주택 농협 등: 3년거치 17년상환(연리 1.5%) 중소기업 소상공인 일반은행: 2년거치 3년상환(연리 2.0%) 중소기업진흥공단: 2년거치 3년상환(연리 1.9%)
도시가스요금	피해유형별(전파, 반파, 침수) 1개월분 정액 감면 - 취사용: 1,680원 - 취사·난방용: (전파)12,400원, (반파·침수) 6,200원
지역난방요금	기본요금 감면 - 기계실 멸실·파손·침수로 열사용 - 불가 - 열공급 중지일~재개일전 기본요금 전액감면
상하수도요금	평균 사용량의 초과분 감면 등
지적측량 수수료	지적측량 수수료 50% 감면
보훈대상 위로금 지원	사망·주택전파 : 500만원 1천만원 초과피해 : 50만원 등
농기계 수리 지원	농기계 유무상 수리
병영의무 이행기일 연기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
병력동원 훈련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당해연도 면제

자료: 곽성일(2017.11.21.). 포항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원 혜택은?. 경북일보

피해수습 비용은 정부가 전액부담

피해수습지원에는 재난 피해수습을 위하여 실시하는 공공시설의 복구, 재난피해자의 수색 및 구조, 오염물 및 잔해물의 처리 및 방제, 합동분향소 설치·운영과 같은 추모사업 등이 있으며, 피해수습지원 비용은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2018년 예산성과금제도 운영 방향

• 시간 : 2018년 1월 16일 화요일 오후 2시
• 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기획재정부

공무원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예산성과금제도'가 도입된 지도 어느덧 20여 년이 지났다. 그동안 기획재정부는 성과금의 지급대상 확대, 지급요건 재설계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으로 예산성과금이 국민과 정부 모두에게 이로운 제도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해 왔다. 이와 같은 인센티브제 도입은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행정수행 유인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어느 정도 개선시켰다는 점에서도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2017년도 하반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우수 사례에 대해 예산성과금을 지급하였다. 기획재정부 재정집행관리과의 예산성과금제도 담당 사무관을 만나 예산성과금제도에 관한 자세한 설명과 향후 제도운영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예산성과금제도는 지출절약 또는 수입 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8년 도입

Q 예산성과금제도가 도입된 지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예산성과금제도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예산성과금제도는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지출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증대된 경우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스톡옵션, 특별상여금 등과 같이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하여 수익성을 제고하고 비용을 절약하는 민간의 경영기법을 공공부문에 적용한 것으로, 1998년 5월 도입되었습니다. 예산성과금제도는 「국가재정법」 제49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목적, 정의, 요건 및 심사위원회 등 구체적인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예산성과금규정(대통령령)」을 통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Q 예산성과금의 지급요건은 무엇인가요?

A. 예산성과금은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지출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증대된 경우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지출이 절약

【 인터뷰 】
김도일 연구원
doylek@kpfis.kr

된 경우"란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정원을 감축하거나,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남게 된 경우, 또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절약예상액을 미리 감액 편성하거나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한편 "수입이 증대된 경우"는 새로운 세입원의 발굴 또는 제도 개선 등 특별한 노력으로 국고의 수입(국채발행수입금 및 차입금을 제외한 국세·관세 및 세외수입 등 일체의 세입재원을 의미)이 증대되거나 「국유재산법」 제5조에 따라 국유재산이 늘어난 경우를 의미합니다.

Q 말씀하신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란 누구를 의미하나요?

A.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는 중앙관서 소속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법령에 따라 중앙관서의 사무를 위임·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임직원도 포함됩니다. 특히 「국민 제안 규정」 등에 따라 채택된 국민제안을 한 자 및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낭비신고를 하거나 예산낭비 방지와 관련한 제안을 한 자도 기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직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경우에는 그 조직의 최소단위 조직도 기여자로 인정됩니다.

Q 예산성과금의 지급 신청부터 심사까지의 절차가 궁금합니다.

A. 중앙관서의 장이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려면 자체심사위원회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산성과금 지급 심사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가 발생한 회계연도로부터 3회계연도가 경과된 경우에는 예산성과금 심사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된 건에 대하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창의성, 노력의 정도, 재정개선효과 및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성과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규모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예산성과금의 신청은 상반기(1월)와 하반기(7월) 연 2회 가능하며, 심사를 거쳐 6월 말과 12월 말에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성과금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 가능하며 심사를 거쳐 6월 말과 12월 말 지급

〈표 1〉 **예산성과금 신청 및 지급 일정**

신청시기	심사시기	지급시기
1. 1.~1. 31.	2~5월	6월 말
7. 1.~7. 31.	8~11월	12월 말

Q 예산성과금의 지급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A. 예산성과금의 지급규모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유형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최대 6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의 내용이 유사사업 또는 다른 행정기관 등에 파급되어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 효과가 현저히 큰 경우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 결정으로 130%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표 2〉 **예산성과금 지급사유 및 지급한도**

구분		지급한도	비고
지출절약의 경우	정원감축	감축된 인원의 인건비 1년분	최대 6천만 원, 다만 위원회 결정으로 30% 추가지급 가능
	경상적경비	절약된 경비의 50%	
	주요사업비	절약된 사업비의 10%	
수입증대의 경우		수입증대액의 10%	

1998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의 재정개선금액은 19.2조 원으로 재정의 비효율적 측면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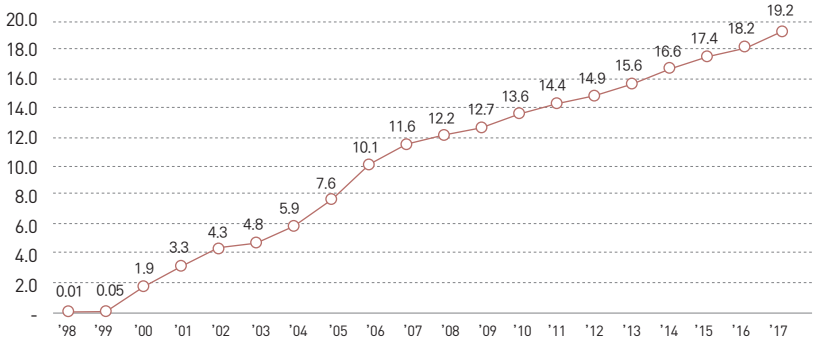
지급대상은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직접 기여한 자에 한하며 기여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주 기여자와 보조 기여자로 구분하여 신청건별 지급액을 기여도에 따라 배분하여 성과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Q 그간의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A. 1998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예산성과금 신청건수는 4,849건으로, 그 중 2,167건에 대해 예산성과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누적기준으로 재정개선금액은 19.2조 원, 성과금 지급액은 367억 원 수준입니다. 그동안 지급된 예산성과금의 지급규모와 개선된 재정금액 규모를 볼 때 예산성과금제도 시행으로 인해 재정의 비효율적 측면이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림 1. **예산성과금 재정개선금액 추이**

(단위 : 조 원, 누적 기준)



또한 2016년 12월 말 예산성과금 지급 규모를 2배 수준으로 상향하고, 신청 및 심사도 일 년에 2번 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으로 2017년의 예산성과금 지급신청건수(209건)가 전년(122건) 대비 71.3% 증가하는 등 제도개선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표 3〉 예산성과금 지급액 및 개선 효과

(단위 : 억 원)

	'98 ~ '13	'14	'15	'16	'17	누적총계
재정개선금액	156,184	10,268	7,948	7,855	9,311	191,566
예산성과금 지급액	350	3	2	3	9	367

Q 최근 2017년 하반기 예산성과금 심사를 마치셨는데요, 심사 시 중점을 두는 부분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기획재정부 제2차관), 부위원장(재정관리관)을 포함한 정부위원 5명과 세제, 국방, 건설, 정보과학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성과금 심사 시 물론 재정개선금액의 크기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다만 기존의 제도나 방법보다 얼마나 창의적인 생각을 하였는지(창의성), 통상적 업무 수준에 비하여 얼마만큼의 노력을 기울였는지(노력의 정도), 또는 개선방안의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인지(파급효과)도 재정개선 금액 못지않게 심사 시 중요한 기준이므로 예산성과금 신청시 신경 써서 내용을 작성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제도 운영 방향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A. 1998년 제도도입 이후 20여 년 간의 운영을 돌이켜 볼 때 예산성과금제도는 공무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속에 공직 사회에 새로운 일하는 방식을 구축하는데 기여하였다고 평가됩니다. 최근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등 어려운 재정환경 속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에 대한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를 위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 또한 더불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재정 집행현장에서 지출절약 및 수입 증대를 위해 노력하는 풍토가 확산될 수 있도록 예산성과금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를 위해 노력하는 풍토가 확산되도록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해 나갈 계획

고대 중국의 화폐 제도

글 하연수 작가 hayonsu@naver.com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것으로 알려진 진나라의 시황제.

그가 통일하기 이전에 중국은 제, 연, 조, 한, 위, 초, 진의 일곱 개 국가에 의한 전국시대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의 말기에, 그전까지 다크호스의 존재였던 진나라가 어느새 다른 국가들을 제치고 통일의 과업을 완수한 것입니다.

이 진나라의 승리에 대해 역사가들은 다양한 분석을 해 왔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매우 큰 경제적 요인도 존재합니다.

바로 화폐의 통일이지요.

진나라는 아직 전국시대의 지방정부에 지나지 않을 무렵인 기원전 336년, 정부에 의한 반량전(半兩錢)을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중국에서는 이미 화폐의 주조가 이루어졌지만, 여러 세력이 많은 도시에서 멋대로 만들고 있어 형태와 가치가 제각각이었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매우 불편하였습니다. 하지만 진나라의 정부는 형태와 가치가 통일된 반량전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사용을 의무화한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다른 나라의 화폐를 가져오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이처럼 '공정화폐'를 만든 것은 당시 중국의 7개국 중에서는 진나라뿐이었습니다.

화폐가 통일되면 유통이 촉진되고 도시가 발전하지요. 정부의 입장에서도 세금징수나 군비조달이 훨씬 수월해지며 무엇보다 수입이 많아집니다. 진나라가 전국시대 말기에 커다란 힘을 가지게 된 것은 이 반량전과 큰 관련이 있음이 분명합니다.

반량전은 원형의 동전이며 가운데에 네모난 구멍이 뚫려있습니다. 이는 구멍에 끈을 통과시켜 들고 다니기 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화폐는 아시아권 특유의 것으로 유럽이나 중동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물론 아시아권의 국가들은 중국의 동전을 흉내 내어 각자의 화폐를 만들었습니다. 일본의 화폐에도 큰 영향을 끼쳤으며 일문전(一文錢) 등에도 같은 모양의 구멍이 있지요.

이 진나라의 반량전을 본뜬 것이 기원전 118년, 전한 무제(武帝)에 의하여 만들어진 오수전(五銖錢)입니다. 오수전은 반량전의 형태를 그대로 답습한 것으로, 700년에 걸쳐 사용되었으며 중국에서 가장 오래 사용된 화폐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은 그 후에도 화폐의 주조에 있어 세계의 선구자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기원전 2세기부터 기원전 1세기까지 전한의 무제에 의하여 만들어진 오수전은, 평제(平帝)까지의 약 120년 동안 280억 개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1년 동안 무려 2억 개 이상이 만들어진 셈입니다. 약간의 과장이 섞였다 해도 엄청난 양의 화폐가 만들어진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이 발행한 100원짜리 동전의 제조량이 처음으로 연간 1억 개를 돌파한 것이 1979년이었으니까요.

중국에서는 평제의 시대(서기 2년 무렵)때 사상 최초의 호적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당시 인구는 약 6,000만 명이었습니다. 단순하게 계산하면 1인당 500개 정도의 오수전이 유통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결손 부분이 있으니 실제로는 그보다 적은 양이었겠지만 여하튼 상당한 숫자의 동전을 국민이 보유한 것은 틀림없어 보이네요.

고대 중국에서 이처럼 대량의 화폐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금속의 가공기술이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이미 철광석을 녹여 거푸집에 흘려서 철제품을 만드는 '주조' 방식이 행하여졌습니다. 반면 중국 이외의 고대세계에서는 철의 경우 해머로 두드려서 만드는 이른바 '단조' 방식만 사용되었습니다.

주조는 대량생산이 가능하지만 철광석을 녹이는 용광로가 필요하기에 높은 기술력이 요구됩니다. 유럽에서 철의 주조가 실시된 것은 14세기 무렵이니, 중국이 천년 이상이나 앞선 셈입니다. 한나라의 시대(기원 전후)에 오늘날의 시스템과 그다지 다르지 않은 송풍기를 설비한 용광로가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금속 가공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동전이나 철전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나라보다 더 많은 양의 동전을 만든 것이 10세기에 등장한 북송입니다.

북송에서 동전을 만드는 주전소는 동전이 37군데, 철전이 44군데에 있었습니다. 북송의 150년 동안 동전과 철전을 합하면 2,000억 개에서 3,000억

개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특히 왕안석이 재상이었던 시대에는 연간 동전 60억 개, 철전 10억 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왕안석은 1073년에 동전의 주조소를 증설하여 이듬해 송전의 외국 반출을 허가합니다. 어쩌면 송전을 외국과의 무역에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당시 북송 국내에서는 동이 남아 돌아 수출을 시작한 상황이었습니다. 동을 그대로 수출하는 것보다는 송전으로 수출하는 쪽이 가치가 높습니다. 즉 당시의 주조소의 증설은 동전을 수출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북송의 동전과 철전은 조선을 비롯하여 일본, 베트남에 대량으로 수출되었습니다. 북송의 동전은 무역에 사용되는 국제통화뿐 아니라 주변국의 일상통화가 되었지요.

고대 중국에서는 이미 환어음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당나라 시대(7세기)에 등장한 '비전(飛錢)'이 바로 그것입니다.

당나라는 평안한 시절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상업이 발전하고 멀리 떨어진 곳과의 거래도 활발해졌습니다. 당시에는 동전이 주된 통화였는데, 상품의 대금을 지불하는 데 있어 동전의 운반이 불편하였기 때문에 외환업무를 담당하는 민간업자가 등장하였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시스템이지요.

장안, 낙양 등의 대도시 상인이 지방에서 상품을 사들이는 경우, 우선 외환업자한테 가서 동전을 맡기고 보관증을 발행받습니다. 이 보관증을 지방에서 온 상품의 대금으로 지방 상인에게 보냅니다. 지방의 상인은 자기 마을의 외환업자에게 이 보관증을 가져가면 동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외환업자끼리는 제휴관계가 있었습니다. 이는 오늘날의 외환은행의 시스템과 거의 비슷하지요.

이 '비전'이라는 시스템은 애당초 민간업자가 담당하고 있었지만 나중에는 관영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국영 외환은행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외환은행은 1147년에 이탈리아의 롬바르디아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실은 300년 전에 중국에서 그와 같은 조직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중세에 들어와서도 중국은 금융, 통화에 있어 세계를 앞서나갔습니다.

북송 시대인 1023년, 중국은 세계에서 최초로 지폐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교자(交子)'라 불리는 것으로, 근대에 세계 각지에서 제작된 지폐와 거의

똑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자가 만들어진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북송 시대는 사천지역에서 상업이 발전하였지만 통화는 철전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송나라에서는 서하와의 전쟁에 대비한 군비조달 때문에 철전을 만들었습니다. 이 철전의 사용을 사천에서도 강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무거운 철전은 들고 다니기가 무척 힘들어 고액거래에는 불편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철전을 보관하는 '교자포'라는 금융업자가 등장합니다.

교자포에서는 철전을 고객으로부터 받아 보관증을 발행하였습니다. 고객은 그 보관증을 교자포로 가져가면 언제든지 철전을 받을 수 있었지요.

이 보관증은 철전과 같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통화대용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보관증을 교자라 불렀던 것입니다. 당시의 사천지역에서는 인쇄기술도 발달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스템이 가능하였습니다.

이 교자는 사천을 중심으로 널리 퍼졌는데, 보관한 철전의 몇 배나 되는 교자를 발행하는 부도덕한 업자도 등장하였습니다. 교자를 교자포로 가져가도 교환해 주지 않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본 북송 정부는 공적인 교자를 발행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를 '관교자(官交子)'라 불렀습니다. 이 관교자야말로 세계 최초의 정부에 의해 발행된 지폐인 것입니다. 관교자는 1계(3년)의 발행액을 125만 관으로 하고 태환준비의 철전은 36만 관으로 정하였습니다. 즉, 36만 관의 철전을 준비함으로써 89만 관을 얹어 지폐를 발행한 것이며, 북송정부는 그만큼의 수입을 얻은 셈이 됩니다. 다시 말해 '철전본위제'에 의한 통화발행을 한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보유한 금의 교환권으로 통화를 발행한 후세의 잉글랜드은행의 시스템과 동일한 것입니다. 잉글랜드은행은 금을 일정량 확보한 후, 보유한 금의 양 이상의 통화를 발행하였습니다. 금의 교환권을 손에 넣은 사람은 그것으로 반드시 금을 교환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대개의 경우 통화로서 이용하였습니다. 때문에 보유한 금의 양 이상으로 교환권을 발행하여도 금이 고갈될 일은 없습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한 것이 잉글랜드은행이며 이는 근대은행의 성립이기도 하였지요.

이와 똑같은 시스템을 북송 정부는 이미 개발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즉, 근대 금융시스템을 앞서나가 교자를 발행한 셈입니다.

한국재정정보원 소식

2018년 한국재정정보원 시무식

- 한국재정정보원은 지난 2일 본원에서 임직원 1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시무식을 개최

- 이날 시무식은 고객응대의 기본 원칙을 공유하고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겠다는 실천의지를 표명하는 고객헌장 선포식을 시작으로 원장 신년사와 직원과의 소통간담회 순으로 진행

- 이원식 원장은 시무식에서 “기관 출범 3년차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조직과 개인이 상생하며 임직원 모두가 하나되어 힘차고 밝은 한 해를 만들어 나가자”고 제안

- 특별히 여느 시무식과는 다르게 원장과 직원간 소통간담회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직원들이 현장근무 중 겪는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원장에게 평소 궁금했던 내용을 자유롭고 솔직하게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짐

- 이원식 원장은 이 자리에서 “격식을 탈피한 시무식 행사를 통해 직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직원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한국재정정보원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각오를 밝힘

e나라도움 이용관련 문화예술계 시·도 간담회

- 한국재정정보원은 1월 5일부터 12일까지 세종, 강원 등 7개 광역시·도에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이용 관련 문화예술계 관계자의 불편사항 의견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

-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은 e나라도움운영단과 주무부처가 검토한 후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그 진행 현황과 개선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유할 계획임

'17년 개도국 재정공무원 초청 FMIS 연수

- 한국재정정보원은 2017년 12월 12부터 14일까지 라오스, 베트남, 스리랑카, 키르키즈스탄, 네팔 등 5개국 재무부 고위 공무원 대상으로 17년 개도국 재정공무원 초청 FMIS 연수(영문명: KPFIS FMIS Capacity Building Program for Asia Pacific)를 진행

- 한국재정정보원은 참가국 연수생들에게 dBrain시스템 데모 등을 통해 한국의 재정개혁 및 dBrain 구축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으며, 참가국별 재정제도 및 재정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축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상호 공유하고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

- 이번 연수를 통해 참가국 간 재정개혁 및 재정정보시스템 관련 논의를 할 수 있는 재정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이를 통해 향후 dBrain 수출을 위한 중요한 협력기반을 마련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내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한국재정정보원은 '제1회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내 아이디어 공모전'을 2017년 11월 13일부터 12월8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

- 이번 공모전은 구성원들의 참신하고 혁신적인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를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총 18건의 아이디어 중 내부 심사를 거쳐서 8건의 수상작(우수상 2건, 장려상 6건)을 선정

- 우수상으로는 "KPFIS Academy 설립"과 "사용자 지원 허브 센터 운영"이 선정되었으며, 공모전 수상작을 대상으로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18년도 시행방안을 수립할 예정임

KPFIS NEWS

2017 브이월드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

- 한국재정정보원은 'e나라재산 시스템을 활용한 효율적 국유재산 관리'라는 주제로 「2017년 브이월드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 시스템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
- 이번 공모전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였으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인프라인 공간정보 활용사례 발굴과 활용 확산을 위해 마련됨
- e나라재산 시스템은 브이월드의 항공사진 등 공간정보와 국유재산 대장정보 등을 융·복합하여 국유재산을 현장감 있게 확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점이 높게 평가됨

국유재산포털 웹 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획득

- 한국재정정보원은 '국유재산포털'의 웹 접근성과 호환성을 개선하여 지난 12월 국가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웹접근성 품질 인증 마크'를 획득함
- 장애인, 고령자 등이 웹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접근성 표준지침을 준수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의 전문가 및 사용자 심사 등을 통과
- 한국재정정보원은 앞으로도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강화와 편의성 확대를 위해 홈페이지 개선에 최선을 다할 예정임

'17년 4분기 재정경제부문 연계기관 협의회 개최

- 사이버안전센터는 12월 5일 기획재정부 및 산하·연계기관 보안담당자와의 '17년 4분기 재정경제부문 연계기관 협의회 개최

– 기획재정부 등 9개 기관 25명의 보안담당자가 참석하였으며, '18년도 연계기관 통합 보안취약점 컨설팅 연간 일정 협의, 최근 사이버침해사고 사례 분석 및 '18년도 사이버공격 트렌트 전망에 대한 교육 진행

– '18년도 재정경제부문 통합 보안취약점 컨설팅 연간 계획안 및 당일 교육한 교육자료 공유 예정

월간
나라재정
2018년 1월호 통권 제13호

발 행 처 한국재정정보원
주 소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메트로타워
전 화 02-6908-8200
팩 스 02-6312-8959
홈 페 이 지 www.kpfis.or.kr

발 행 인 이원식(한국재정정보원장)
편집위원장 박용주(한국재정정보원 연구본부장)
편 집 위 원 강영규(기획재정부 재정전략과장)
최성진(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과 사무관)
연훈수(재정정보연구본부 연구위원)
심혜인(재정정보연구본부 부연구위원)
조은미(경영지원본부 차장)
이현석(디브레인운영본부 차장)
박종필(사이버안전센터 차장)
김칠수(e나라도움운영단 차장)
편 집 간 사 김도일(재정정보연구본부 연구원)

디자인·제작 케이에스센세이션 02-761-0031

한국재정정보원

Korea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rvice

주소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메트로타워 **전화** 02-6908-8200 **팩스** 02-6312-8959 **홈페이지** www.kpfis.or.kr